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 기소권 절충은 안 된다

유족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정의를 호소한다

관련 기사 6~7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오늘날의 제국주의

▶ 10~13 면

가톨릭 진보 언론인이 본

교황 프란치스코

▶ 4~5 면

진보 교육감

시대의 교육 혁신

▶ 14~15 면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보당

해산 시도의 문제점

▶ 8~9 면

미국의 이라크 공격

▶ 3 면

누구의 말일까요?

“정치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치인들 잘 살라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느냐를 자문해 봐야 할 때”

박근혜, 당신이야말로 자문해 봐라

“우리는 주권이 있고, 안정적이고, 자족할 수 있는 나라를 이라크에 넘겨 주고 간다.”

오바마가 2011년 말 철군하면서 한 헛소리

“제대로 단식을 하면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어? 벌써 실려가야 되는 거 아니?”

새누리당 의원 안홍준

“국회에서 … 어디 뭐 노숙자들 있는 그런 … 바람직하지 않다.”

새누리당 김태흠이 세월호 유가족 농성에 대해, 국회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 사생활이다.”

박근혜의 잃어버린 7시간 의혹에 새누리당 조원진의 답변, 이러니 더 궁금해질 따름

“참 슬프게 올 때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박 대통령의 그날 울음은 닭똥 같은 눈물이 아니라 그냥 닭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시장 앞이 무슨 오토캠핑장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천막 쳤다 건었다 뭐하나 싶습니다.”

명진스님의 일갈

“북한과 연관된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믿지 못하는 사람,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비판적인 사람,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사회 세력”

검찰이 말하는 ‘중복의 유형’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이 문명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가치인가.”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완구, 그럼 피의자가 수사하고 기소하는 건 문명인가

“우리가 집권당이고 1백50석 이상 가지고 있으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죠.”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와 면담 중에서 박영선, 결국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말

“박정희와 유신 관련 문항이 너무 많으니 문제를 줄일 것”, “북한 관련 문제들은 뺄 것”, “삼청교육대 내용도 뺄 것”

EBS <필수 한국사> 교재에 대한 교육부의 사전검열

“난이도가 높으면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높아질 것 같아 그렇게 한 것”

EBS <필수 한국사> 교재 검열에 대한 교육부의 해명, 몰랐으면 했던 것 같은데?

“1억2천7백만 원”

박근혜 정부가 군 인권에 쓴 예산, 전체 국방예산의 0.0005퍼센트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에 연대를

씨앤엠과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월 10일부터 전면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여름의 폭염과 태풍을 맨몸으로 견디며 월청 앞 노숙농성을 시작한 지도 한 달이 넘었다. 노동자들은 직장폐쇄 철회, 고용보장, 생활임금, 안전한 일자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 농성이 길어지면서 생활고, 육체적 피로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노동자들은 투쟁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한다.

“씻지도, 제대로 잘 수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같까 불안한 마음도 큼니다. 그러나 아이가 씻이나 있는 동료도, 나이가 많은 동지도 물러서지 않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어요.”

“비 오는 날 베란다에서 손도 잘 닿지 않는 곳에 공사를 하다 떨어져 죽은 동료, 전주에서 감전돼 떨어져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된 동료가 떠올랐습니다.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처지가 바로 세월호 그 자체예요. 회사가 절연장갑이 비싸다고 사주지 않아 고무장갑 끼고 일을 해요. 이것을 바꿔달라는 요구를 어떻게 멈출 수 있나요?”

파업이 길어지면서 영업손실도 생기고 있다. 최근엔 씨앤엠 원청이 지난 한 달 반 동안만 15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대체인력 8천 명을 고용했다는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씨앤엠과 티브로드 사측이 이런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버티는 것은 이번에 노동자들의 기세를 꺾지 못하면 몸집을 불리기 위한 영업 경쟁과 씨앤엠 매각·인수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씨앤엠 정규직으로 일할 때, 회사는 외주업체로 가면 수입도 나이지고 수입도 다 보장할 거라고 했어요, 그런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분노를 대변하는 씨앤엠·티브로드 비정규직 투쟁 8월 13일 케이블방송 노동자 투쟁 승리 서울지역 2차 결의대회.

데 6개월 만에 약속을 어겼어요. 이제는 정규직과 임금 차이가 1천만 ~ 1천5백만 원까지 납니다. 우리는 너무 몰랐어요, 노조라도 있었다면 그렇게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회사를 매각하면 당장 우리부터 구조조정할 겁니다. 이번 싸움에 지면 단지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노조를 지켜야 하고 이번 싸움도 꼭 이겨야 합니다.”

낮은 곳의 연대

씨앤엠과 티브로드 노동자들은 세월호 단식 농성에 참여하고, 교황 방한에 맞춰 ‘낮은 곳의 연대’를 호소하는 등 정치 쟁점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투쟁 소식을 알릴 뿐 아니라, 노동자들도 더 넓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왜 시위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관심을 갖게 돼요. 당장 그 속에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씨앤엠 정규직 노동자들도 비정규

직 투쟁에 연대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돌아가면서 노숙 농성에 동참하고, 매달 1인당 50만 원씩 비정규직 노동자 생계비 마련을 위한 ‘투쟁 채권’을 사기로 했다. 매각을 앞둔 상황에서 노조를 깨기 위해 협력업체를 직장폐쇄하고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하는 사측에 맞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하고 있는 것이다.

씨앤엠과 티브로드 노동자들의 투쟁은 다른 간접고용 작업장에도 주목을 받고 있다. “노조가 만들어진 LG와 SK 사측이 우리 파업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유선통신뿐 아니라 무선통신 노동자들도 LG전자서비스 등 비슷한 처지의 간접고용 노동자들로 조직화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번 투쟁은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노동자들이 투지를 발휘하며 투쟁을 이어가자 연대로 확대되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두 차례 서울지역 결의대회를 열고, 민주노총도 씨앤엠 대주주인 MBK 앞에서 간접

고용 노동자 문화제를 열었다. 투쟁 지원을 위해 대책위에 참가하는 단체들이 늘고 지역대책위 건설도 계속되고 있다.

간접고용 문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이를 사회적으로 쟁점화하고 투쟁들을 연결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두 차례 간접고용 노동자 투쟁 문화제를 개최했고 이후 간접고용 문제를 다루는 사회적 연대기구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계획들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투쟁 기금, 생계 지원을 포함해 실질적인 연대와 지원도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굳건합니다. 다만 생활고로 힘들어 하는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동지들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에 이어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승전보를 올릴 수 있도록 진정한 노동자 연대를 보여 주자.

조명지

고용허가제 10년

단속추방과 차별로 점철된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2014년 8월 17일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된다.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인 ‘이주 관리 시스템’으로 정착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 노동운동 진영과 진보 단체들은 모두 이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한다.

고용허가제가 법률로 제정된 2003년 8월 이후 지금까지 18명이 단속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 올 6월까지 무려 23만 명이 추방됐다. 2003년 말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과 고용허가제 반대를 내건 명동성당 농성 투쟁은 무려 3백80일 동안 지속됐다.

정부도 인정하듯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해 왔다. 이주노동자 사용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것도 기업들이다. 경제 위기에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줄지 않았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절반이 매일

10시간 이상 일하고 70퍼센트 가량은 임금이 1백40만 원도 안 될 정도로 노동조건이 열악하다. 경제 위기가 닥치자 정부는 고용주들을 위해 고용허가제 노동자 26만여 명의 처지를 더 후퇴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 미적용, 임금에서 숙식비 공제 등의 조치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게 해줬다. 제한된 사업장 변경 권리조차 박탈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출국한 후에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사실상 퇴직금 강탈 제도를 도입했다.

또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내국인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적대감을 부추긴다.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는 것은 전체 노동자들에게도 해롭다.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함께 싸우는 것은 분열을 막고 서로의 권익이 신장되는 데 일조한다.

최근 대구 건설노조 사례가 대표적이다.▶ 본지 130호 대구경북건설지부장 인터뷰 기사 참조)

기계가 아니라 사람

정부는 미등록 체류 이주민을 ‘불법 체류자’라고 부르며 그들이 사회악이라든가 되는 양 비난한다. 그러나 수년간 체류하며 적응해 온 곳에서 더 머물기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주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사실 어떤 수단으로든 미등록 체류를 완전히 막기는 불가능하다. 또, 이제 이주노동자들 중에 숙련 노동자층이 생기면서 고용주들도 이들을 필요로 한다. 물론 정부는 이런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영주권이나 국적을 얻을 자격조차 주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들의 정주(定住)를 막으려는 정부의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이주노동자들의 수가 늘고 정주하

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더 조직화되기 마련이다.

아직 운동의 규모가 크지 않고 조직화 수준도 낮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은 저항에 나선 잠재력을 보여 줬다. 2011년 건설 현장에서는 베트남 노동자들이 작업 중단으로 고용주의 양보를 얻어 냈다.

지금 이주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연대다. “우리 뒤에 우리를 지지하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있어 줘야 힘이 난다.” 한 버마 출신 이주노동자의 말이다.

연대는 이주노동자들이 자신감을 얻어 저항에 나설 수 있게 돕는다. 정부와 보수 언론이 부채질하는 인종차별을 악화시킬 수 있다. 고용허가제 폐지, 사업장 이동 자유의 온전한 보장, 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운동을 지지하며 연대를 확대해 나가자.

이정원

미국은 이라크 폭격 중단하라

제국주의가 손 떼는 것이 평화의 첫걸음이다

김종환

6월 초 '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국가', 즉 ISIS가 이끄는 수니파 반군이 이라크의 제 2도시 모술을 함락시키고 빠르게 진격하기 시작했다. ISIS는 지금은 '이슬람국가' 수립을 선포했다.

시아파 주도의 이라크 정부는 매우 종파적이었고 부패했다. 그래서 이라크 국민의 환멸이 컸고, 이에 ISIS는 실제 군사력 이상의 힘을 발휘했다.

그러자 8월 8일부터 미국은 이라크를 폭격하기 시작했다. 철근한 지 불과 2년 만이다. 미국의 이라크 폭격에 왜 반대해야 하는지, 오늘날 이라크 위기는 무엇에서 비롯했고 진정한 해법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미국의 인도주의 운운은 '악어의 눈물' 이라크 전쟁으로 평범한 이들의 삶이 망가졌다. 2008년 11월 구호품을 받으려고 줄을 선 여성과 아이들.

미국의 폭격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오바마는 이슬람국가한테서 이라크 인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폭격을 '인도주의'의 이름으로 정당화한다. 이슬람국가가 잔혹하고 아주 종파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폭격은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인도주의'의 이름으로 자행된 제국주의의 개입은 언제나 재앙을 낳았다. 1999년 미국은 밀로세비치의 '인종 청소'에 반대한다며 나토를 앞세워 세르비아를 폭격했다. 그러나 서방이 명분으로 내세운 인종 청소는 상당히 과장이었고, 오히려 서방의 폭격 이후 인종

간 갈등이 더 격화됐다.

2013년 리비아에서도 서방은 독재자 카다피에게서 민중을 구한다는 구실로 폭격에 나섰다. 그러나 희생자의 상당수는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던 리비아 민중이었다. 지금 리비아에서도 내전 발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슬람국가는 자신이 제1차세계대전 이래 중동을 지배한 서방 제국주의에 맞서 싸운다고 선전한다. 미국의 폭격은 이슬람국가의 명분을 강화하고 종파 간 갈등을 부추겨 더욱 극단적인 대응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폭격은 중동에 대한 자신의 패권을 위한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를 폭격하는 진정한 이유는 따로 있다.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점령하며 친미 정부를 세워 중동 지배의 한 축으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세계 최강대국이 10년 가까이 점령하며 수립한 정부가 저리도 엉망진창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미국의 위신은 큰 타격을 입었다.

지금 미국은 이슬람국가로부터 이라크 정부를 지킴으로써 자신의 패권을 지키려 한다.

서방은 물론이고, 다른 곳에서는 미국과 다투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제국주의 열강들도 이라크 폭격을 재빨리 지지하고 나섰다. 제국주의는 국적을 불문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목숨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보여 준다. 제국주의 지지자들은 이라크에 투자한 석유 시설이 이슬람국가로부터 보호되기를 바랄 뿐이다.

한국의 지배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라크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가 위협할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한다.

중동은 원래 종파 갈등이 심하다는 착각

이슬람국가는 테러 조직 알카에다조차 "극단적"이라고 비난할 정도로 잔인하고 종파적이다. 시리아에서는 같은 반군일지라도 종파와 종족이 다르면 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세력이 성장한 주된 책임은 제국주의의 중동 개입에 있다.

몇십 년 전에만 해도 이라크에서 종교의 이데올로기적 영향력은 훨씬 작았다. 1958년 이라크 혁명은 제1차세계대전 때 영국이 세운 꼭두각시 왕정을 타도했는데, 시아파·수니파·쿠르드족이 함께했다. 사담 후세인 시절에조차 이라크는 아랍에서 가장 세속적인 나라의 하나였고, 수니파와 시아파가 결혼하는 일이 흔했다.

그러나 미국은 점령을 통해 시장주의 조처로 대중의 삶을 파괴하고 종

파 간, 종족 간 갈등을 부추겼다. 미국의 점령 말기에는 저항세력의 일부가 미국과 친미 정부에 협력하며 대중의 환멸이 더 커졌다. 지난해 말에는 팔루자에서 일어난 저항 운동이 이라크 정부의 대대적 살인 진압으로 패배했다. 이 운동은 수니파가 주도하고 시아파가 지지한 것이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이슬람국가는 팔루자를 비롯해 이라크 곳곳에서 거점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또한 시리아에서 주변 열강의 개입으로 혁명이 군사적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이에 절망한 사람들이 이슬람국가로 이끌렸다. 이슬람국가에 자원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팔레스타인·체첸 등 제국주의의 억압에 신음하는 나라 출신자들이다.



미국은 이라크를 점령하면서 무슨 짓을 했나

미국은 9년(2003~11년) 동안 이라크를 점령했다. 한국의 노무현 정부는 5년 동안 자이툰 부대를 파병하며 미국을 적극 지원했다. 점령기에 미국과 동맹국들이 실제로 한 일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이라크인 대부분의 삶을 망가뜨렸다. 이라크 전쟁을 주도한 조지 부시 등 미국의 네오콘들은 시장주의 광신도들이기도 했다. 오늘날 이라크는 시장의 폐해를 극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라크의 석유 생산량은 미군 점령과 함께 빠르게 치솟아 올 봄에는

3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은 인근 나라들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줌밖에 안 되는 부자들이 전체 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이라크인 9백만 명은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심지어 비교적 안정적이고 시아파가 주민의 다수인 남부의 유전 도시 바스라에서도 3명 중 1명은 구걸을 해야 하는 처지다.

둘째, 종파 간, 종족 간 갈등을 부추겼다. 미국은 점령 초기 이라크인들의 저항 운동에 호되게 당한 뒤 분열을 조장

하기 시작했다.

2004년 미국은 수니파가 주민의 다수인 도시 팔루자에서 수천 명을 학살했다. 그러면서 조기 선거를 실시하며 시아파 최고 성직자에게서 점령에 대한 협조를 얻었다.

이후 수립된 이라크 정부는 철저히 종파를 따지며 관직과 자원을 배분했다. 가장 종파적인 자들이 성장하도록 부추겼다. 수니파 저항세력의 일부를 매수해 저항세력들끼리 싸우도록 했다.

지금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혼란과



종파 간 갈등은 미국의 이라크 점령이 낳은 산물이다.

약해진 미국 제국주의와 진정한 이라크 해방

오늘날 이라크 상황은 10여 년 전에 반전 운동이 했던 경고가 옳았음을 보여 준다. 곧,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가져다 줄 수 없다. 미국과 영국이 그들이 침공한 나라 사람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번 전쟁[이라크 전쟁]은 테러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번 전쟁 때문에 테러 공격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전쟁으로 유혈 사태, 억압, 절망, 빈곤은 더 늘어날 것이고, 이에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들은 테러 공격에 의존할 것이다.”(격주간 <다함께>, 2003년 3월 29일자, 하단 사진)

전 세계적 반전 운동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했고 한국은 파병을 강행했다. 그러나 점령군은 현지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사실상 끝없는 추가 병력을 원했지만, 국제적 반전 운동 때문에 그것은 정치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

결국 미국은 안정적 친미 정부를 수립하지 못한 채 도망치듯 철군해야 했다. 지금 미국은 이라크에 군대를 대규모 파병하는 상황을 꺼리고, 한때 자신이 “악의 축”으로 지목한 이란한테서도 손을 빌려야 하는 처지이다. 이처럼 반전 운동은 오늘날 미국 제국주의가 십여 년 전보다 약해지는 데 크게 일조했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세력들이 이라크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 이라크 평화의 첫걸음이다. 이라크 출신의 한 사회주의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만일 이라크 등지에서 아랍인들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민주적인 정권이 탄생해서 중동에서 제국주의의 지배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개입하는 목적은 이 지역에서 이를 막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폭격에 반대하고, 한국 지배자들이 또다시 이라크에 개입하려 들면 이를 저지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



가톨릭 진보 언론인이 교황 프란치스코의 방한에 관해 말하다

이 글은 진보적 인터넷 언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의 **한상봉**(5면 하단 사진) 주필이 **맑시즘2014**에서 한 강연을 녹취한 것이다. **한상봉** 주필은 강연 중엔 가톨릭 교회 교종을 줄곧 “**교황님**”이라는 존칭으로 불렀지만, <노동자 연대>는 존칭을 생략하는 관행에 따라 그냥 “**교황**”으로 표기했다. 가톨릭 신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서는 찬사도 많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인기 스타가 된 교황이다’ 하는 말도 합니다. 때마침 방한하시기 때문에 더욱 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저한테 언론사 여기저기서 전화가 왔어요. 그만큼 관심이 뜨겁지만 또,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별로 없다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한국 가톨릭 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교황 방한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으로 논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두세 명 정도예요. 물론 신부 중에도 더러 있기는 한데 사제들은 공식 발언을 하는 데서는 조심스럽다 보니 그런 사람이 별로 없죠. 그만큼 교회 안에 진보진영이 상당히 오랫동안 위축돼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발언 중 여러 분이 아는 발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중 하나는 ‘교회는 안운한 성전에 머물지 말고 거리로 나가야 한다. 거리에서 상처받고 명들고 더러워지는 교회를 나는 원한다. 교회는 아전병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전병원으로서의 교회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교황이 다른 식으로 교회를 표현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라는 말을 써요.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 이걸 지금 한국 교회 현실과는 정반대예요. 한국 교회는 중·상층 이상을 위한 중·상층 교회거든요.

교황의 이 말은 한국 교회 지도자한테는 매우 도전적인 발언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뿐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부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들을 위해 살려면 오히려 교회가 가난한 교회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아전병원”이라는 말과 연결되는데, 아전병원에 대형 병원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전병원은 천막 치고 하는 거예요. 즉, 교황의 말은 ‘내가 원하는 교회는 천막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당장 응급 환자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장비를 갖고 그들과 함께 있어 주는 거예요.

이틀테면, 광화문 광장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님들과 진보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제들이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단식농성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단식농성 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냥 지금 상처받고 고통받고 안타까워하고 억울해 하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니까 함께 있어 주는 거예요. 그런 걸 ‘동행한 다’고 해요.

사실은 그분들이 거기에 함께 앉아 있는 것보다는 염수정 추기경이 대통

령을 만나든지, 아니면 명동성당에서 대규모로 미사를 하면서 정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린다면 그게 훨씬 효과가 커요. 염수정 추기경이 명동성당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미사를 직접 한다면 전국의 사제 4천 명 중 1천 명 이상이 모일 거예요. 지난번에 4대강 공사 반대 서명을 한 신부가 전체 사제의 절반이었어요. 전체 가톨릭 사제의 45퍼센트 정도가 아주 급진적이지는 않더라도 비교적 진보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사제가 1천 명이 모인다면 평신도는 가톨릭 교회의 특성상 수십만 명이 모일 거예요. 그러나 고위 성직자들은 나서지 않을 거예요.

‘벌어먹는 교회’

이것과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 하나는 교회가 ‘벌어먹는 교회’가 아니라 ‘벌어먹는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교황의 교황명은 다들 알다시피 프란치스코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 [13세기 초 아시시의 수사로, 프란치스코회 창립자]의 가장 특징적인 태도가 ‘탁발’이에요. 즉, 자기가 어디 가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벌어들이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동네 다니면서 선한 사람에게서 벌어들이는 거죠.

벌어먹는다는 것이 뭐죠? 그 사람이 나에게 매력을 느끼거나 호의를 느낄 행위를 내가 하지 않는다면 밥 한 톨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못 얻어먹어요. 즉, 자기가 벌어들여야 될 상대에게 충분히 봉사하고 자기를 내주어야만,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그들이 내가 먹을 빵과 우유와 물을 주게 돼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힘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과정이에요. 일종의 수행이죠. 내가 있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가난한 사람의 하나가 돼서 그들과 함께 동반해서 사는 것. 이게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이야기한 거고, 이게 바로 ‘벌어먹는 교회’의 특성이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의 경우에는 ‘벌어먹는’ 게 아니라 ‘벌어들였다’고 나선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서울교구의 ‘평화드림’이에요. 강남 성모병원에 가 보면 거기 주차장을 평화드림이 운영합니다. 거기 있는 커피숍, 빵집 등 모든 시설을 다 평화드림이라는 주식회사가 운영합니다. 그 평화드림의 이사장이 서울대교구 신부예요. 서울대교구 학교유지재단, 가톨릭학원유지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평화드림이어서 교회에 들어오는 팩스 용지부터 모든 기자재가 평화드림을 통해서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사진 출처 사진공동체재단



사진 출처 사진공동체재단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고 있다.

일반 회사나 개인들이 하는 회사와 연계해서 납품을 받았어요. 그 사람 중에는 신자도 있고 신자가 아닌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걸 다 차단하고 너희가 가톨릭 교회에 납품하려면 평화드림에 소속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드림이 창립되자마자 자회사와 지점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예전에 개인적으로 사업하면서 납품하던 회사들이 전부 지점이나 자회사로 들어온 거죠. 안 그러면 납품이 안 되니까요. 한마디로 밥줄을 잡고 기업 확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물품은 다 가톨릭 교회에 떨어지게끔 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한 대로 소기업들을 자기 회사에 종속시키는 형태로 확장을 했어요. 재벌들이 많이 쓰는 합병 방법으로 회사를 확장했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충분히 벌어들이고 살겠다는 거죠.

충분히 벌어들이고 살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죠? 대중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돈을 벌어서 쓰는데 누구 눈치 볼 게 없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서울교구는 전체 교구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교구이지만 가장 보수적인 교구이죠.

교황 방한의 효과

지금 교황 방한의 효과가 무엇일지 여러 논란과 질문이 있어요.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지금 한국 교회는 교황 방한이 결코 달갑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교황은 비유럽게 교황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황이 순방지로 맨 먼저 간 곳이 브라질이에요. 그다음이 한국이에요, 그리고 알바니아에 갑니다.

다음이 스리랑카이고, 다음에 필리핀에 갑니다. 전부 제3세계 나라들이예요.

특히 브라질은 상징적인 곳이에요. 해방신학의 못자리죠. 그래서 유럽 교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 브라질 교회예요.

알바니아는 대부분의 국민이 무슬림이에요. 이런 나라에 교황이 가는 거예요. 한국은 분단 국가이고 정전 상태인 국가죠.

스리랑카는 불교 국가예요. 필리핀은 가톨릭 신자가 대부분이지만 매우 가난한 나라예요. 전부 아시아 지역이고, 분쟁지역이나 타 종교가 장악한 나라예요. 굉장히 어려운 곳에만 가는 거예요. 미국은 안 가요. 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죠. 앞서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와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 교회는 이 교황은 맞이

▶ 5면으로 이어짐



광화문에서 농성 중인 노동자들과 차별받는 사람들이 교황에게 정의를 호소하고 있다.

▶ 4면에서 이어짐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사실, 중요한 국책사업인 강정 해군 기지, 쌍용, 밀양 여기에 다 누가 있나요? 가톨릭 교회의 진보적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깊숙히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 세력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곳도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의 진보적인 사제나 수도사들은 한 번 물면 안 놔요. 끝까지 가요. 미사를 한 번 시작하면 매일 죽 하죠. 큰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질기게 끝까지 가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영적 지지를 제공하는 주교가 있죠. 강우일 주교입니다. [이분을 포함해서] 지금 한국 교회에서 진보적 주교가 네 분 있어요. 안동교구 권혁주 주교는 의식이 굉장히 깨어 있어요. 의정부교구 이재현 주교, 춘천교구 김은혜 주교도 비교적 진보적인 분들이예요. 교구가 너무 작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정의구현사제단 전통이 약해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요. 아무튼 이런 분들은 지금 주교회의 안에서 힘이 없어요. 아주 소수파죠.

보수적인 주교들이 예뻐하는 신부는 모두 서울 강남 안에서 돌아요. 왜 그럴까요? 강북지역은 전체 주민대비 가톨릭 신자 비율이 5~15퍼센트예요. 평균 10퍼센트라고 보면 돼요. 강남은 주민 대비 신자 비율이 25퍼센트예요. 대치동은 30퍼센트입니다. 전체3명 중 1명이 가톨릭 신자인 셈이에요. 그리고 강남 지역의 충성도는 거의 70퍼센트에 육박해요. 신자가 되면 굉장히 충성스럽게 성당에 나와요. 왜 그럴까요? 입맛에 맞으니까. 그러면 강남에 있는 신부는 어떻겠어요? 이진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의 기쁨》 등[교황의 권고문에서] 교황이 교회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 잣대를 들이대면 한국 교회는 대부분 바로 해체돼야 해요. 특히 서울교구는 정말 심각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교황을 맞이할 자격이 있는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수이긴 해도 어떤 분들은 이번에 교황이 오시면 한국 교회에 영적인 힘으로 크게 작용할 거라 생각해요.

특히,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를 주장하고 실천하려는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공박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점이 교회 운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데올로기 투쟁이잖아요. 이데올로기 투쟁할 때 진보세력이 선점할 수 있는 거죠.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면 [교계의 보수파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황이 갖고 있는 영적 권위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제들의 정서는 진보적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교구장의 생각에 따라 아주 쉽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시복식

시복식 관련해서 잠깐 말씀 드리면, 제 글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시복식이 열리는 장소가 광화문이에요. 광화문은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국가 권력의 핵심 기관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옛날 형조와 의금부가 있던 장소예요.

조선 봉건 정부에 의해 학살당한 순교자들은 국가가 공인한 성리학을 존중하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사악으로 몰려서 처형당했잖아요.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억압당한 거예요. 시복식은 그 사람들을 국가적으로 범죄자가 아니라 복자이고 의인이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기존 국가 권력에 의해서 [부당한] 혐의가 씌워진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복권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시복식을 여는 것은 큰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번에 그 장소의 중앙에 누가 있나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계세요. 이분들의 자녀가 왜 죽었죠? 국가가 죽음을 방조한 거죠. 세월호 유족 농성장이 바로 시청광장에서 광화문광장 카 퍼레이드 하는 그 중간에 있어요. 그럼 당연히 교황이 유족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교황은 세월호 가족들에게 이미 위로의 말을 전했고, [문제를] 잘 알고 있어요.

시복식은 국가 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모든 사람들을 위하고, 복자, 죽은 순교자들을 위한 자리예요. 시복 선언은 이미 3월인가 2월에 교황청에서 했어요 그걸로 끝난 거죠. 그런데도 시복식을 하는 이유는, 시복식이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한 잔치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 자리는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잔치의 장소인 거죠. 이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교황이 다녀가시고 나서 한국 교회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노예의 종교'

시몬 베이유가 '그리스도교는 노예들의 종교'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발언은 시몬 베이유가 처음 한 게 아니라, 니체가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또 파지고 보면 이미 앵겔스도 이야기했고, 마르크스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해방 신학자가 한 말 가운데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공산주의를 비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이념은 가장 복음적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에 따르면, 시초 교회는]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모두 사도 앞에 내놓고 모두가 필요한 만큼 나눠 썼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물론 그런 공산주의가 가능하나 아니냐는 문제는 방법과 관련된 다른 문제예요.



마태오복음서에서 '원 뺨을 때리면 오른 뺨을 내라', '네 원수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나요? 굉장히 높은 도덕적 가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아무런 규범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냐? 그럼 그냥 없던 걸로 하자고 할 수 있느냐? 없어요. 즉, 신약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공산주의 이념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나 아니냐는 그것이 규범적이나 아니냐의 문제와 구분되는 것이죠. 즉, 이진 거룩하고 영원한 갈등인 거고,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가야 할 지향점이에요. 멀리 그물을 치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교가 노예들의 종교라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리스도교의 원천은 이집트 탈출기[출애굽기]이에요. 탈출기에서 하느님은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을 해방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지금 노예들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분을 [교회 주류가] 잊고 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지금 그들이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사실상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교가 실제로 노예들의 종교이고 "억압받는 자들의 한숨"[마르크스]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다행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을 해방시키는 것은, 억압받는 자들이 해방되는 과정을 통해서 인류 전체가 해방되는 것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해방되지 않는 한 부자들도 결코 해방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해방? 탐욕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요. 이게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예요. 부자들이 탐욕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가난한 자들이 해방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부자들을 해방시키려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가난한 자들이 해방되면 부자들은 자동으로 해방되니까요. 그래서 교황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가 돼야 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교회는 부자들을 잘 구슬려서 그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촉구해 왔던 말이에요. 그게 되나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황은 첫 단추를 정확히 꿰자는 거예요. 교회는 야전병원이니까 큰 건물을 지으려고 생각하지도 말고 거처처럼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그들의 해방을 위해서만 싸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치적으로 투신하라는 거예요. 이런 게 하루아침에 안 되겠죠. 시간을 갖고 해야 해요. 교황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개혁은 천천히, 굉장히 더딜 것이다. 천천히 갈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끝까지 갈 것이다".

권영국 민변 세월호 참사 특위 위원장이 말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원인 그리고 대책은

이 글은 맑시즘2014에서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가 연설한 것을 녹취한 것이다. 지면 제약으로 불가피하게 축약했다.

지금 세월호 특별법 야합에 대한 비난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유가족들이 싸움을 주도해 왔다. 우리 사회에서 참사의 희생을 겪은 가족들이 싸움을 주도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 싸움을 가장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 건 유가족들이다. 그래서 나도 부끄럽기도 하고 또 굉장히 놀랍기도 하다. 이번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싶다.

[내 발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1) 세월호 참사의 진상: 진상 이라기보다는 현상이라고 하면 될 것 같다. 2)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 원인: 이것은 배가 침몰하게 된 직접적 원인에 대한 것이다. 3) 세월호 참사의 10대 원인: 침몰을 둘러싼 배경들이 상당히 많다. 우리가 지난 국정감사기 관보고 때 89가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4) 진상규명 과제와 대책: 현재 특별법에 대해서 여야가 야합을 했는데, 과연 이 야합이 진상을 제대로 밝힐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



국립해양조사원 제공 사진

세월호 참사의 진상

세월호 침몰 경위: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세월호는 원래 4월 15일 저녁 6시 30분경에 출발하려고 하다가, 안개가 많이 끼서 지연이 됐다. 그러다가 밤 9시경에 출발하게 됐다. 지금 이것도 의문에 싸여 있다. 가시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 되지 않으면 원래 출항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기상관측소의 자료에 따르면 그때 가시거리가 8백 미터였다고 한다.

그리고 4월 16일에 진도 부근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변침을 했다. 135도에서 145도로 변침을 시도하던 중에 갑자기 좌현으로 기울었고, 그리고 나서 10시 17분경에 108.1도로 기울어서 완전히 전복됐다.

배가 침몰할 때 8시 52분에 최초 신고 전화가 있었고 8시 55분에 일등항해사가 제주 VTS에 구조 요청을 했다. 그리고 9시 35분경에 해경 123 경비정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간에 헬기가 도착한다. 9시 30분경에 해경이 도착하긴 했는데, 그로부터 한 40~50분이 지난 10시 17분에 아무도 구조되지 못하고 ‘배가 기울고 있어요’라는 마지막 메시지가 발신된다. 결국은 탑승자 4백 76명 중 초기에 스스로 탈출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선내에서 아무도 나오지 못하고 3백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시간대별 침몰 경과: 시간별로 배가 기울어진 각도를 보자. 8시 52분에 배가 이동을 멈췄다고 한다. 처음에 배가 멈추고 좌현으로 기울었을 때, 기울어진 각도가 얼마였을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

다. 대체로 25도에서 35도 정도였을 거라고 본다. 그리고 123정이 도착한 9시 35분경에 배의 기울기는 52.9도. 그리고 마지막 문자가 전송됐을 때가 108.1도다.

세월호 선박의 제원: 선박의 제원을 한번 보자(표1). 여기서 증설 전과 증설 후의 경하중량과 재화중량을 주목해서 봐야 한다. 경하중량은 여객이나 화물을 싣지 않았을 때, 선박 자체의 무게를 말한다. 그런데 이 무게가 증개축을 하면서, 1백87톤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무게중심이 한 51센티미터 정도 위로 올라가게 된다. 배가 복원하려면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위로 올라가 버린 거다. 그리고 이런 증개축으로 화물과 여객을 싣을 수 있는 양이 변했다. 증설 후에는 화물과 여객을 합해서 1천70톤까지만 싣으라고 돼 있다.

화물과 여객, 평형수, 연료유, 청수(먹는 물), 식량을 다 합친 게 재화중량이다. 그런데 평형수 란을 보면 증설 전에는 출항할 때 3백70톤, 도착할 때 1천23톤, 증설 후에는 출항할 때 1천7백 톤, 도착할 때 2천30톤이다. [증개축을 하고서]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오니 아래에 평형수를 많이 넣을 수밖에 없었다.

평형수를 보면, 출항할 때와 도착할 때가 다르다. 그런데 지금 검찰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없다. 왜 평형수가 이렇게 출항과 도착 때 달라질 수밖에 없을까? 그건 이유가 있다. 출항 때에는 연료유나 청수나 식량 같은 것들이 배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평형수 구실을 한다. 그래서 출항 전 후에 평형수가 약 3백 톤 정도 차이가 난다. 연료유는 출항할 때는 5백60톤인데 도착하면 56톤이 된다. 5백 톤 가까이 소모된다. 이게 소모되니까 [그 무게만큼] 평형수를 채워야 하는데 이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흘수라는 게 있다. 배는 바다에 띄워지면, 어느 선까지 가라앉아야 된다. 이런 흘수는 평형수나 화물을 가지고 조절한다. 만약에 화물을 많이 실으면 흘수선이 높아진다. 그런데 흘수선에 일정하게 잠기는 깊이를 조정하려면 화물 대신에 뭘 빼야 될까? 평형수를 빼야 한다. 예를 들면 화물이 천 톤이 더 실렸으면 밑에 있는 걸 빼야 된다. 그러니까 또 무게중심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매우 불안한 상태가 되는 거다.

탑승자의 직군별 생존자와 사망자 수: 생존 비율을 살펴보자. 총수는 4백76명인데 구조자는 1백72명으로 생존율이 36퍼센트다. 그런데 선장 등 선박직 승무원은 1백 퍼센트 생존했다. 그리고 단원과 학생들이 23퍼센트, 교사가 21퍼센트 생존했다. 그리고 배 안에 갇혀 있던 서비스직 승무원들은 1백 퍼센트 사망했다. 일반 승객들은 70퍼센트 생존했다. 굉장히 높는데, 이 분들 중에는 [이 항로를] 자주 왕래하는 분들이 많았다. 화물 기사들인데, 이분들은 화물선 아래 쪽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탈출하기가 쉬웠고, 배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기 명령을 듣지도 않았다.

표1. 세월호 선박의 제원 (증개축 전후 비교)

< 복원성 계산 결과 >					
구 분	증 설 전		증 설 후		비 고
	출항	도착	출항	도착	
경하중량	5,926톤		6,113톤		187톤 증가
무게중심*	11.27m		11.78m		0.51m 증가
①화물+여객	2,525톤		1,070톤		
②평형수	370톤	1,023톤	1,700톤	2,030톤	
③연료유	548톤	110톤	560톤	56톤	
④청 수	368톤	74톤	290톤	29톤	
⑤식량 등	170톤	166톤	170톤	166톤	
재화중량	3,981톤	3,898톤	3,790톤	3,351톤	①~⑤ 총합
흘 수	6.26m	6.22m	6.26m	6.06m	
계산 결과	복원성(GoM)	0.98m	0.95m	1.42m	1.05m

* 무게중심(VCG) : 선박의 경하중량상태에서 수직방향의 무게중심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 원인

먼저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침몰 원인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검찰 공소장에 이렇게 돼 있다. ‘증개축으로 복원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걸 맞는 얘기일 거다. 그 다음에 ‘세월호 선원들의 교육 훈련이 규정대로 실시되지 않았다’라고도 돼 있다. 만약에 교육 훈련을 제대로 했다면, 자기들 먼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대피시키려고 노력했을 거다. 그 다음에 ‘화물 과적과 고박 불량’ 그리고 ‘선장 및 항해사의 운항 과실(조타 과실로 인한 급변침)’도 있다.

그런데 과연 급변침으로 인해서 침몰이 일어났까? 파도가 칠 때 배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롤링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파도가 심하게 치면, [좌우로] 배가 요동을 친다. 그래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심하면 45도, 더 심하면 60도까지도 배가 파도에 따라서 롤링을 한다. 그래도 침몰하지 않는다고 한다.

보통은 아무리 급선회를 하더라도 자기 배 길이의 4~5배 정도 길이를 따

라서 회전을 하게 된다. 운전할 때 한 150킬로미터로 밟다가 확 돌아버리면? 차가 확 뒤집어질 것 같다. 실제로 가끔 넘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세월호 선박의 최고 속력은 21노트 정도인데, 이걸 자동차로 치면 한 37~8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한다. 그 정도 속도로 배가 정말 기울어질까? 물론 급변침할 때 기울어지는 현상은 발생하지만 자동차를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 배가 130도 돌아도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거다.

다음으로 화물 과적 문제가 있다. 그런데 과적 그 자체가 아니라 화물을 무리하게 빨리 실으면서 단단하게 규정대로 고박을 하지 않은 게 문제였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선박의 선체 두께는 10~20밀리미터밖에 안 된다. 배가 흔들리면서 느슨한 고박이 풀려 세월호 하부에 실린 컨테이너 무거운 화물들이 선체를 여러 번 때린다면, 배에 상처가 생길 수 있다. 잠수함 설도 있지만, 이것이 더 합리적 의심이 아닐까.

무엇인가

세월호 참사의 10대 원인

① 돈벌이를 위해 승객 안전을 도외시한 해운사의 선박 운항

정상적으로 한 번 운항할 때 청해진 해운의 화물 수입료는 2천6백 만 원이다. 그런데 과적을 하면 최대 7천 만 원의 수입료를 올릴 수 있다. 과적을 할 유혹이 생긴다. 그래서 2013년에 세월호가 들어오고부터 청해진해운의 화물선 매출이 급증한다(표2).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들여오면서 화물에서 어떻게 이익을 추구했는지를 보여 준다.

세월호는 도입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원래 항로의 평균 운송수입률이 25퍼센트 이상이 안되면 선박을 증선해 주면 안된다. 그런데 세월호는 제대로된 자료로 계산해 보면 평균 운송수입률이 24.3퍼센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가 대상이 못 되는 거였다. 그런데 청해진해운은 제출 자료에서 여객 정원하고 재화중량 톤수를 조작해서 평균 운송수입률을 26.9퍼센트로 조작했다. 그래서 운송 면허를 따낸 거다.

② 선원 교육이나 안전 훈련 “0”와 선원들의 무책임

교육은 어땠을까? 청해진해운은 지난해 매출이 3백20억 원인데, 이 중 선원 교육에 쓴 돈은 54만 원이었다. 반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대비로만 9억 원 넘게 지출했다. 선원 연수원비는 매출액 대비 0.001퍼센트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외부에서 진행되는 안전교육에 참가하면 발급되는 수료증 발급 수수료였다. 그게 1인당 2천 원인 것이다. 교육 훈련을 한 게 아니라 수료증 주고 말았다는 거다. 형식만 갖췄다는 얘기다. 사실상 선원들에 대한 교육 및 안전훈련 비용은 ‘0’원이었다.

선원들은 왜 이렇게 무책임했을까. 고용형태를 보면 계약직 비율이 76~77퍼센트다.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위험하니까 곧 나가야 되겠다’ 이

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 의식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즉, 책임 있는 선원과 선장을 만들려면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근무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다.

③ 감독기관의 안전관리감독 부재 — 민간유착 관행 고착화

선박에 대한 등록·면허·검사 및 운항과 관련한 주체별 업무를 보자. 해양수산부는 한국선급을 지도·감독해야 하고, 해양경찰은 해운조합을 지도·감독해야 하고, 해운조합은 해운사를 지도·감독해야 하고, 그리고 한국선급은 정부의 선박 검사 업무를 대행한다. 한국선급이 뭐냐 하면 해운사들이 출자해서 만든 사단법인이다. 그러니까 해운사들이 만든 사단법인이 안전 검사를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한국해운조합이 안전 관리를 해야 하는데, 해운조합 조합원이 누구인가? 해운사들이다. 해운사들이 가입돼 있는 조합이 해운사를 안전 관리 감독한다? 정말 잘 될거다.

결국은 [해양수산부가 하는] 증선 인가가 부실[해지고], [한국선급이 하는] 복원성 선박 검사도 부실[해진다.] 운항관리규정을 승인할 때는, 운항관리 규정 심사위원회에 들어가는 해경들을 직전에 제주도 같은 데로 여행을 보낸다.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심사위원회가 열리고, 복원성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관리규정을 승인하게 된다.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으면 해운사들이 출자한 한국선급이나 해운사들이 조합원인 한국해운조합을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해수부 차관이 해운조합 이사장이다. 해수부가 누구를 관리해야 하는가? 해운조합을 관리해야 한

다. 그런데 그곳의 이사장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 해수부의 해사기술과장이 한국선급의 본부장으로 간다. 그 다음에 해수부 산하의 해양항만청장이 선박안전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온다. 해수부 [공무원들이] 감독해야 하는 곳의 이사장으로 다 가버린다. 관리감독이 굉장히 잘 될 거다.

그 결과, 한국선급의 선박 검사 합격률을 한 번 보자. 2009년 검사 선박이 1천6백7대인데, 합격 선박이 1천6백7대이다. 1백 퍼센트 합격률이다. 우리 나라 해운사들이 정말 잘 하고 있나? 이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선박 검사 내역을 봐도 비슷하다(표3). 사고 건수는 계속 있는데도, 최근 5년간 선박 검사 합격률이 99.98퍼센트이다. 합격률이 이 정도면 사고가 안나야 할 텐데, 나고 있는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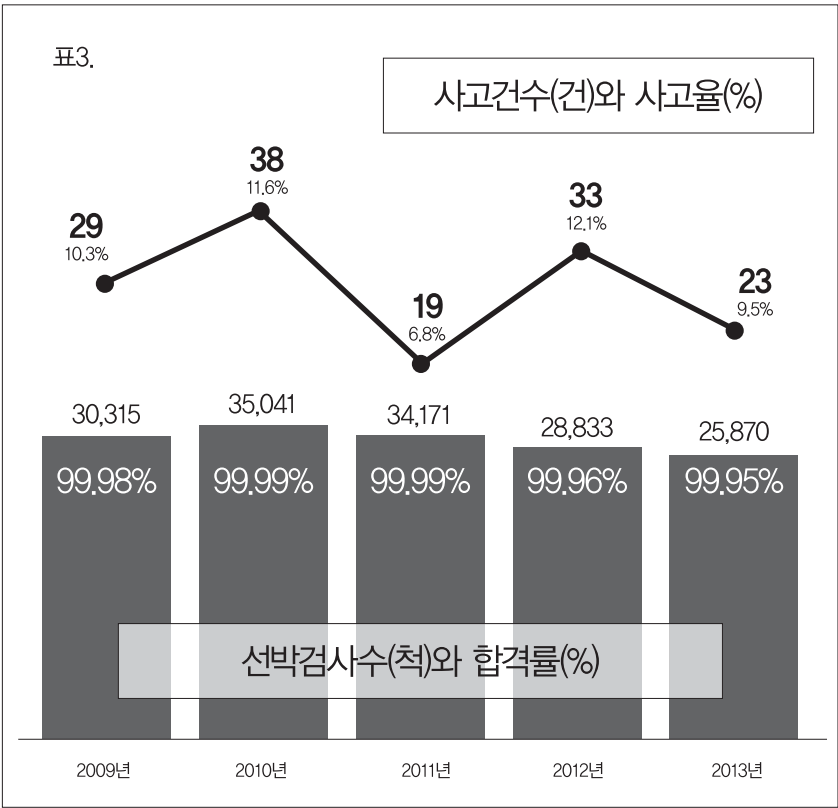
결국 주무부처와 관료 출신 인물들이 공사나 이런 데 다 들어가 있는 상황. 이게 적폐다. 그런데 이런 걸 누가 하는가? 대통령이 한다. 청와대가 관여한다. 이래 놓고 자기가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하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④ 해경의 초동 대응 부재

초동 대응이 부재했다.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뭐하고 있었다. 혼자서 신문 보다가 엎드려 자고, 화면을 보질 않았다. 그리고 해경은 선원만 구조하고 10시 17분까지 전혀 퇴선 조치도 안하고 배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다. 해양 특공대는 출동해야 할 시간에 헬기가 없어서 못갔다고 한다.

⑤ 역량 있는 구조 인력 지원 차단

해경이 외부지원을 배제했다는 의혹도 있다. 119에서 ‘우리가 도와줄까’ 했더니 ‘해경하고 해군이 다 하고 있으니 까 올 필요 없다’고 했다. 그리고 국방부 답변서를 보면, “탐색 구조를 주도하고



있는 해경에서 잠수 작업 통제로 해경 잠수팀 우선 입수”, “해경이 현장 접근을 통제하여 잠수 미 실시”라고 돼 있다.

⑥ 원칙 없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해경과 해양수산부의 부실화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원칙 없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경과 해양수산부가 부실화돼 있었다. 이명박 정부 때 해양수산부 폐지되고 국토해양부로 확 통합시켜 버리지 않았냐. 해양부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⑦ 수난구호법 개정에 따른 해양안전업무의 민영화와 위험의 증대

2012년에 수난구호법 개정에 따라 구조업무 자체가 이미 민영화되고 있었다. 이때 민영화의 고리를 해양구조협회라는 데가 담당했다. 근데 해양구조협회의 부총재가 누구였는가? [민간 잠수업체] 언딘이었다. 해양안전업무를 민영화해 버림으로써 해경은 구조작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스스로 상실해 갔다.

⑧ 정부의 재난대응역량 부재 — 시스템의 형식화와 개념없는 인사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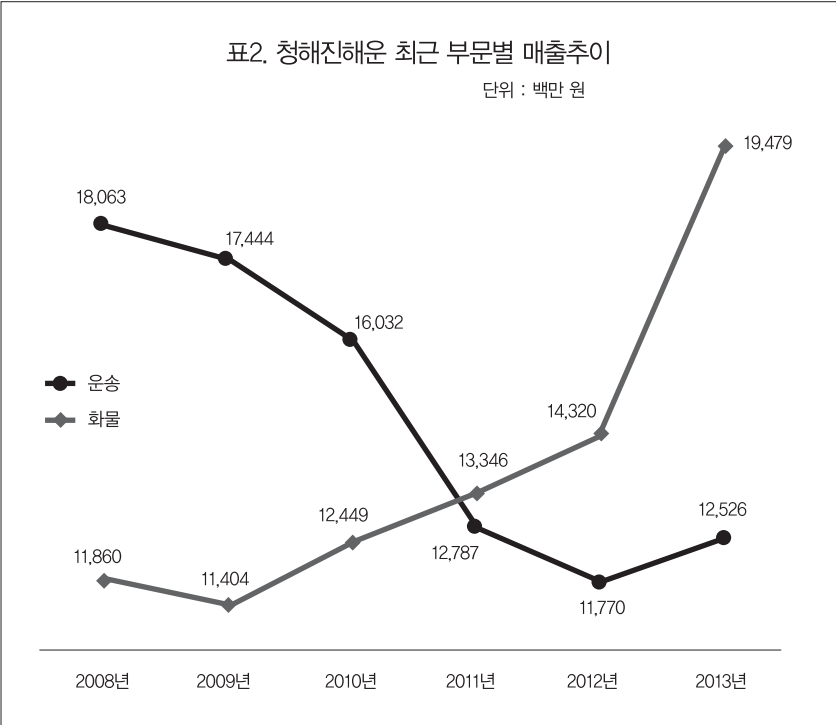
박근혜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형식적이었는가는, 정부가 재난 컨트롤타워라고 하면서 얹혀 놓은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대부분이 행정직 고위 관료 출신으로 재난 및 현장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들이었다. 애초에 재난 컨트롤타워 구실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⑨ 청와대와 대통령,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책임으로부터 도피

그런데 컨트롤타워가 잘 못하고 있으면 누가 해야 하나? 청와대가 해야 한다. 정부조직법 11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돼 있다. 이걸 법적인 의무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계속 ‘영상 보내라’, ‘구조자 수 보내라’ 하는 식으로 보고만 요구했고, 어떻게 구조하라고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청와대로부터 전화가 많이 와서 해경청장이 전화받으러 가느라고 대책회의를 5분 만에 중단시켜 버렸다는 의혹도 있다. 청와대가 구조를 방해한 거다.

⑩ ‘규제는 암덩어리’ 규제 혁파 등 무제한적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한 안전 장치의 해체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규제를 암덩어리로 여기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안전 장치를 해체한 사회·경제 정책이다. 여기에 근본 원인이 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규제 완화 정책이 심하게 이뤄졌다. 박근혜 정권 때는 해양수산부에서 하던 ‘해상교통안전진단 의무화’가 폐지되고, 철도 차량을 정밀 진단하지 않고 보고서 승인만으로도 차량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됐다. 내가 앞서 언급한 일들은 이러한 규제 완화 정책의 영향을 고스란히 다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 3월에 ‘규제 개혁 추진 과제’를 발표해, 안전 관련 규제들을 간소화, 완화, 폐지했다.



진실규명 과제와 대책

기업의 이윤 추구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규제 완화로 인한 안전장치 완화, 재난관리시스템의 형식화와 안전 규제 업무의 민영화, 감독기관의 유착 구조, 무책임한 낙하산 인사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의 부재. 근본 원인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진행 중인 수사나 감사의 내용은 뭔가. 유병언 때려죽일 놈, 자질부족한 선원들 때려죽일 놈, 돈 받아 처먹은 몇몇 실무 담당자들, 그리고 구조 안 한 해양경찰 123정. 이것만

지금 줄창 잡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근본 문제를 제대로 파헤칠 수 있겠냐. 대통령이 진도에서 ‘약속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물러나야 한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세월호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 아무도 없다. 5월 19일 답화문에서 최종 책임은 자기한테 있고, 사과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더니 청와대 증인 채택도 거부하고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부여하는 게 사법 체계 흔든다며 거부하고, 밀실야합했다.

유병언 잡는 데 연인원 1백70만

명을 동원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유병언은 악마가 됐다. 정부 정책이나 시스템에 대한 조사 있었냐. 지금 검찰이 청와대나 장관들 수사할 수 있겠냐. 해경청장 수사할 수 있겠냐. 규제완화 정책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겠냐. 대통령에게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 실효성 있는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독립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녹취 박충범

내란음모,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국가보안법 그리고 정치 사법

이 글은 8월 9일 맑시즘2014에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사진가) 강연한 “내란음모,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국가보안법 그리고 정치 사법”을 녹취한 것이다. 지면 제약으로 불가피하게 축약했다.



사진 출처 (이호중)

‘종북’ 매카시즘의 한 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작년에 거의 1년 동안 종북물이 가 극심했다. 8월에 내란음모 사건을 국정원에서 터뜨렸고 10월에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구가 있었다. 이 사건들은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종북 매카시즘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전개됐고,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한다.

왜 “종북”인가

“종북” 개념부터 얘기하겠다. “종북”이란 말이 언제부터 등장했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2006년 일심회 사건을 계기로 “종북”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던 것 같다.

이는 처음에 진보진영 안에서 시작됐지만, 2012년쯤에는 보수가 하나의 담론, 개념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2012년 대선쯤에 보수가 본격적으로 “종북”을 들고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보수 논객들은 “종북” 개념을 굉장히 확장해서 쓴다. “종북 게이”라는 말 들어 봤는가? 이것은 북한을 명목적으로 추종하는 게이라는 뜻이 아니고, 성소수자·동성애자들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즉, “종북”이란 말이 본래의 의미를 넘어 사회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세력이나 사상, 담론 등을 의미하는 말로 확장된 것이다.

종북 담론에 기반한 사법권력적 통제 부분을 보자. 경찰은 종북 담론에 기초해 안보 사찰을 굉장히 강화했다. 이런 의미에서 경찰은 “종북”을 “안보 위해 세력”이라고 정의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에 대한 감시,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한 사찰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사이버 상에서 친북 웹사이트를 발견하고 차단하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 문건을 삭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불법 문건 삭제 건수를 보면, 2005년 1천2백 건

에서 2009년 1만 4천 건, 2010년 8만 건으로 늘었다. 이 정도 추세이면, [지금의 해마다] 10만 건 정도 갈 것이다.

경찰이 [연평균] 10만 건 가까운 삭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웹사이트 운영자] 요구를 수용하는 비율이 99퍼센트 된다. 이것이 오늘날 국가보안법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위력인 것이다.

사상의 다원성을 전제로 공론장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서는 기초라면, 이것은 공론장 자체를 완전히 한쪽으로 편향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오피스텔에서 대치했던 국정원 직원 김모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내 업무는 국정원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 종북 성향의 웹사이트를 감시하는 일이다.”

이건 남한 안에서 소위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활동을 계속 감시하면서 그것을 억누르기 위한 활동이다. 이견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다. 2010년 경부터 소위 “원장님 지시 말씀”에 따라 [국정원]이 대북심리전단을 구축하고 직원들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국정원이 댓글 달기를 통해서 사상 통제에 나서고 있었다. 경찰·국정원이 우리 사회에 종북 매카시즘의 저변을 만들어 나가는 여러 작업을 했던 것이다. 내란음모 사건은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오게 됐다.



7월 28일 서울지방법원 앞 '내란음모' 사건 검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내란음모 혐의는 정당한가

과거, 내란음모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일이 몇 건 있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인혁당 재건위와 민청학련 사건이었다. 그 외에는 1980년 김대중법치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다. 2010년 경부터 소위 “원장님 지시 말씀”에 따라 [국정원]이 대북심리전단을 구축하고 직원들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국정원이 댓글 달기를 통해서 사상 통제에 나서고 있었다. 경찰·국정원이 우리 사회에 종북 매카시즘의 저변을 만들어 나가는 여러 작업을 했던 것이다. 내란음모 사건은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오게 됐다.

그리고 34년이 흐른 상황에서 내란음모죄가 다시 등장하게 됐다. 2014년 2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그 판결문을 보면 이런 논리다. ‘이석기 의원을 총책으로 한 RO라는 지하혁명조직이 존재하더라. 그리고 2013년 5월 12일 모임은 조직원들의 모임이었다. 여기서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임박했다는 판단 하에, 국가

기반시설을 파괴하는 폭동 행위를 모의했다. RO의 성격상 향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동시다발적인 파괴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내란음모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RO의 실체가 실제로 입증됐는가? 증거법에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하려면 무죄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을 배척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본문만 3백 페이지쯤 되는 1심 판결문의 어미를 봐도, RO가 있을 정도라는 말하지만 그 조직의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 이것은 사실, 증거법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내란음모의 요건은 뭘까?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 또는 그것을 음모하는 것이 내란음모다. 내란음모에서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말하려면 일단 범행 계획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하겠다고 해서 내란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시 5월 12일 모임에서도 유류 시설, 또 해화동의 전기·통신 시설을 파괴하겠다는 말들이 오가고 했는데,

그게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의 범죄일까? 실제로는 그런 요건도 갖추지 못한 내용이었다.

구체성의 요건도 결여돼 있다. 실제, 5월 12일 모임 녹취록이 있다. 물론 녹취록이 증거가 되느냐 하는 것도 다름거리의 하나이지만, 그 녹취록을 위 회합에서 폭동의 세부적인 계획에 까지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논의된 폭동의 실현 가능성과 실질적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이나 직접성 요건도 갖추야 하고, 실제로 실현에 옮길 수 있는 물질적 기반과 기술적 기반이 존재해야 한다.

[요컨대] “실질적 위험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왜 유죄 판결을 내렸을까? 판결문의 문구 하나를 인용하겠다. “당시 남북관계에 조성된 군사적 대립 국면의 정도와 상부의 지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조직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위 회합에서 폭동의 세부적인 계획에 까지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논의된 폭동의 실현 가능성과 실질적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시 말해, 총책의 지시만 있으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문에 위험하다는 것이다. 아무런 구체적 계획이 없는데도 말이다. 이처럼

“종북” 담론은 내란음모죄의 “실질적 위험성”이라는 성립 요건을 굉장히 완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종북 세력이어서 위험하다’ 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1975년도 인혁당 재건위 사건,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 대법원은 일부 피고인의 내란음모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 기준이 바로 “음공성이 있느냐 없느냐”였다.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실을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서 판단했던 것이고, 1970년대 활용된 논리가 40년이 지난 후에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공개변론의 모습

종북 매카시즘과 “법 질서” 확립

서양 사회의 매카시즘은 1950년대 의 얘기였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보안법과 사상 통제가 여전하다. 앞에서 말한 대로 경찰은 사이버 상의 표현물에 대한 엄청난 통제를 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의 배경이 되고 있다.

종북 매카시즘이 갖는 부정적인 상징에도 주목해야 한다. ‘종북’은 진보 운동이 갖고 있는 역사성과 시민적 주체성을 부정하는 용어이다.

‘애네들은 언제든지 지령만 있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안보에 위해가 되는 세력’이라는 식의 논리로 연결해서 현재 매카시즘이 일어나는 한편, 정치적으로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비판적 문제의식과 운동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제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현재의 종북 담론은 결국 이런 의미이다.

이게 왜 이럴까? 신자유주의 시대에 고용 불안이나 양극화 때문에 결국은 시민적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는, 지배 권력의 처지에서 늘 위기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세계화 시대에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본의 유통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결국 이런 사회에서 지배 권력은 정치적 정당성을 끊임없이 의심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상황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시민사회 안에 공동의 적을 만드는 것이다. ‘누군가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이다,’ 그 사람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형벌 권력을 강화하면서 정치적 통제를 해 나가는 방법 말고는 없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정치나 법률 영역에서 나타나는 경향은 통제국가이다. 통제국가는 단순히 형벌기관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IT기술의 발전에 기반해 엄청난 감시 기술을 확장시키는 효과를 동반한다. 이런 통제국가화 경향을 이데올로기로 뒷받침

하는 것이 박근혜가 떠들었던 소위 “사회안전”, “무관용주의”, “법질서 확립” 같은 것이다.

이런 것을 내걸면서 [박근혜 정부] 결국 한 짓은 무엇이었는가?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세력을 종북이라는 말로 시민사회의 적으로 상징하고, 그 사람들을 치기 위한 여론 작업들을 하면서 형벌 권력을 계속 강화하는 작업을 했던 것이다.

무엇이 필요할까?

통합진보당 사건이나 내란음모 사건 뿐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시민사회의 저항적인 표현들을 탄압하려는 국가권력은 강화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대항한 앞. 밀양, 제주 강정 등지에서 계속 목격해 왔다.

무관용주의는 단순히 형사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조직 자체를 완전히 와해시키고 거기에 시민들이 연대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다. 훗날 때 유모차를 끌고 나온 엄마들한테도 다 영장이 발부됐다. 이런 식으로 연대를 끊임없이 깨버리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시민적 연대와 저항을 만듦이 나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에 관해서 논의할 때, 법학에서는 주로 미국의 이론이나 판례를 많이 얘기한다. 이때 미국의 판례는 주로 1960년대에 한참 진보 세력과 복지국가 이념이 부각됐을 때 나온 판결들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사회적 저항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궤멸돼 버리면, 이론으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 그 전에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저항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작업, 연대의 작업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독일 공산당 해산의 경험

독일 공산당 사례에 비춰,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어떻게 봐야 할지 보자. 유럽 평화화 산하에 ‘법을 통한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 위원회(베니스위원회)가 있다. 베니스위원회가 정당 해산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바 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정당의 금지, 강제 해산은 민주적 헌법질서를 전복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폭력 사용을 주장하거나 폭력을 사용하고 이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를 손상시키는 정당에 한해서만 [적용]될 수 있다.” “정당이 헌법의 평화적 변경을 주장한다는 사실

만으로 정당을 금지하거나 해산시킬 수 없다”는 대목이 나온다.

베니스위원회가 이렇게 명시한 것은 바로 독일 공산당 사건에서 해산 결정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이다.

1950년대 독일[당시 서독]에서 정당 해산이 두 건 있었다. 하나는 사회주의 제국당이라는 나치 계승 정당이었다. 그러나 당시 사회주의 제국당은 법원에서 해산 결정이 나오기 전에 자자들이 해산했으므로, 독일에서 실제 정당 해산 결정 사건은 1956년 공산당밖에 없다.

1951년, 당시 아테나워 정부가 공산

당에 대한 위험정당 심판청구를 한다. 당에서 독일에서 가장 뜨거운 정치 쟁점은 독일의 재무장이었고, 그다음이 통일 문제였다. 미국은 독일에 미군을 배치해 동구권과의 대치에서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하려고 계속 독일의 재무장 정책을 추진했다. 그리고 아테나워 정부는 이 일을 추진하기로 미국 정부와 협약을 하고 국내에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독일 공산당이 재무장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당시 재무장 반대에 서명한 독일 사람은 1천만 명 정도 됐다. 당시 독일 공산당은 재무장

정책을 반대하는 여론을 주도하고 있었다. 아테나워 정부 입장에서 독일 공산당은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그런 상황에서 공산당에 대한 위험 심판을 청구했다.

눈엣가시

당시 독일 공산당 정강의 주된 내용은 주독 미군 철수, 독일 재무장 반대 그리고 동독과의 평화통일이었다. 지금 통합진보당이 내걸고 있는 거랑 비슷했다. 그래서 처음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소장이 “나는 위험정당이 아니라고

본다. [심판 청구]를 철회하라” 하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다 결국 1956년 위험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그 논리는 이랬다. ‘너희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추구한다고 하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 혁명을 얘기한다. 사회주의 혁명은 결국 폭력 혁명을 예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너희도 프롤레타리아 독재, 폭력 혁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위험하다. 지금 내건 정책이 폭력 혁명을 직접 추구하는 건 아니냐 하더라도 그런

논리가 아니었다. 정당 해산 결정 후, 광풍과 같은 탄압이 곧 일어났다. 결정이 난 날, 경찰은 공산당의 지역사무소들을 전부 급습했다. 그리고 독일 공산당이 운영하던 인쇄소, 신문사, 라디오 방송국이 당일 바로 폐쇄됐다.

그리고 독일 공산당원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내란음모 같은 것을 적용해서 처벌했다. 당시에 수사 대상자가 20만 명 정도였다고 한다. 심지어 독일 공산당 상징 색이 빨간색이었는데, 과거에 공산당원이었던 사람이 누군가에게 빨간 장미를 선물했는데 그것조차 처벌했다. 국가모독죄로 말이다. 그러니까, 위험정당 해산은 하나의 정당만 그날 없어진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사상을 독일 안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맑시즘2014 하이라이트

오늘날의 제국주의 이해하기

세계적 석학으로서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인 알렉스 캘리니코스(사진)가 8월 7~10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맑시즘2014’ 참가를 위해 방한했다. 이 글은 캘리니코스가 8월 9일 강연한 ‘오늘날의 제국주의 이해하기’를 녹취한 것이다. 본문 속의 []은 〈노동자 연대〉편집팀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가한 것이다.

오늘날 제국주의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단순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오늘날 세계에서 제국주의는 눈에 띄는 현상입니다. 이라크에서 발을 완전히 빼겠다고 맹세하다시피 했던 오바마 정부 하에서 미국은 어제[8월 8일] 다시 이라크를 폭격하고 나섰습니다. 이렇듯 상식적인 면에서조차 제국주의는 오늘날의 중요한 현실입니다.

상식적 의미로 제국주의는 어떤 강대국이 깡패 짓을 하고 다니는 것을 뜻

합니다. 이런 의미의 제국주의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급이 등장한 뒤의 인류 역사에는 제국이라고 부를 만한 국가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미국이 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좌파들이 제국주의를 곧 미국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르크스주의적 의미의 제국주의 개념이 아닙니다. 제국주의를 미국의 지배로만 보면 정치적으로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제국주의는 경제적 경쟁과 지정학적 경쟁이 결합된 체제를 뜻한다

그렇다면,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제국주의란 과연 무엇일까요? 레닌의 유명한 소책자를 통해 그 개념이 잘 알려져 있어서 알고 계신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 소책자는 《제국주의 — 자본주의의 최신 단계》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자본주의의 최신 단계’입니다. 레닌 사후에 사람들이 레닌의 논지를 잘못 읽어 그 소책자의 제목을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해,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 발전의 특정한 단계를 가리킵니다.

이 개념을 좀 더 정교하게 이해해 보죠. 이와 관련해 제가 얘기한 것이 있고, 데이비드 하비도 제 주장과 매우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즉, 자본주의 하에서 제국주의는 경제적 경쟁과 지정학적 경쟁이 서로 만나, 결합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격 규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경제적 경쟁은 자본주의의 주된 동력의 하나입니다.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자본은 오로지 많은 자본들(다수 자본)로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본가 계급은 안을 들여다보면 경제적으로 서로 분열돼 있고, 그런 분열 때문에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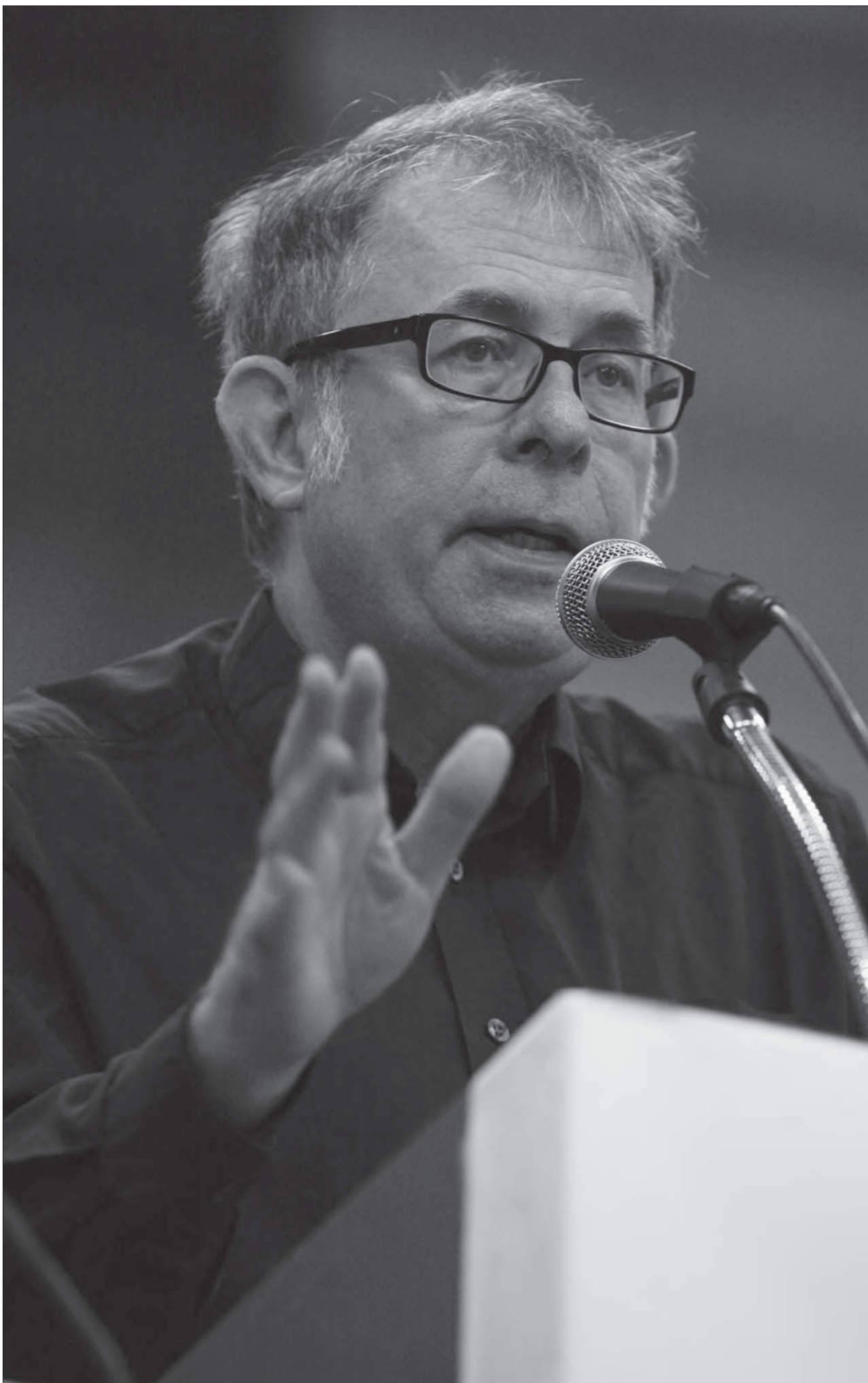
이 경제적 경쟁이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동력이 됩니다. 먼저, 경쟁 때문에 자본가들은 서로 앞다투어 축적을 해야 합니다. 달리 말해, 생산을 더 효율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윤의 일부를 투자해야 합니다. 이처럼 경제적 경쟁은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요소입니다.

지정학적 경쟁은 국가들 사이의 경쟁을 뜻합니다. 국가들은 자원과 영향력과 영토를 서로 더 많이 차지하려 하며, 외교적으로도 서로 대결을 벌이고 더 극단적으로는 군사적 대결을 벌입

니다. 지정학적 경쟁은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예를 들어, 2천 년 전 지중해에서는 로마제국이 동쪽의 페르시아제국 등과 경쟁을 벌였습니다. 중화제국은 동쪽의 속국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책략을 부렸고 서쪽으로는 유목민들과 대결했습니다. 이처럼 지정학적 경쟁은 계급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습니다.

자본주의 하에서 제국주의는 국가들 사이의 지정학적 경쟁이 자본주의의 경쟁 논리에 통합되고 종속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런 현상은 19세기 말부터 본격화됐습니다. 마르크스는 축적이 계속되면 자본이 집중·집중된다고 했습니다.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윤을 재투자하면서 덩치가 계속 커 집니다[집적]. 그뿐 아니라, 경제 위기를 거치며 더 크고 더 효율적인 기업들이 살아남아 더 작고 취약한 기업들을 흡수·통합합니다[집중]. 그러면, 갈수록 더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경제를 쥐락펴락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제국주의 등장의 배경이 됩니다.

먼저, 자본들이 점점 더 세계적 수준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미 19세기 말에 유럽의 자본이 엄청난 규모로 나머지 세계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본가들 사이의 경제적 경쟁이 점점 더 국제화됩니다. 자본들은 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자국에 기대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개별 국가들은 다른 국가와의 지정학적 경쟁에서 이기려 하며 자국 자본에게 점점 더 기대게 됩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국가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철도·대포·자동화기 등을 생산하려면 중화학공업 기반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즉, 자본은 갈수록 국가가 더 필요해지고, 국가도 마찬가지로 자본이 더 필요해지는 것입



진웅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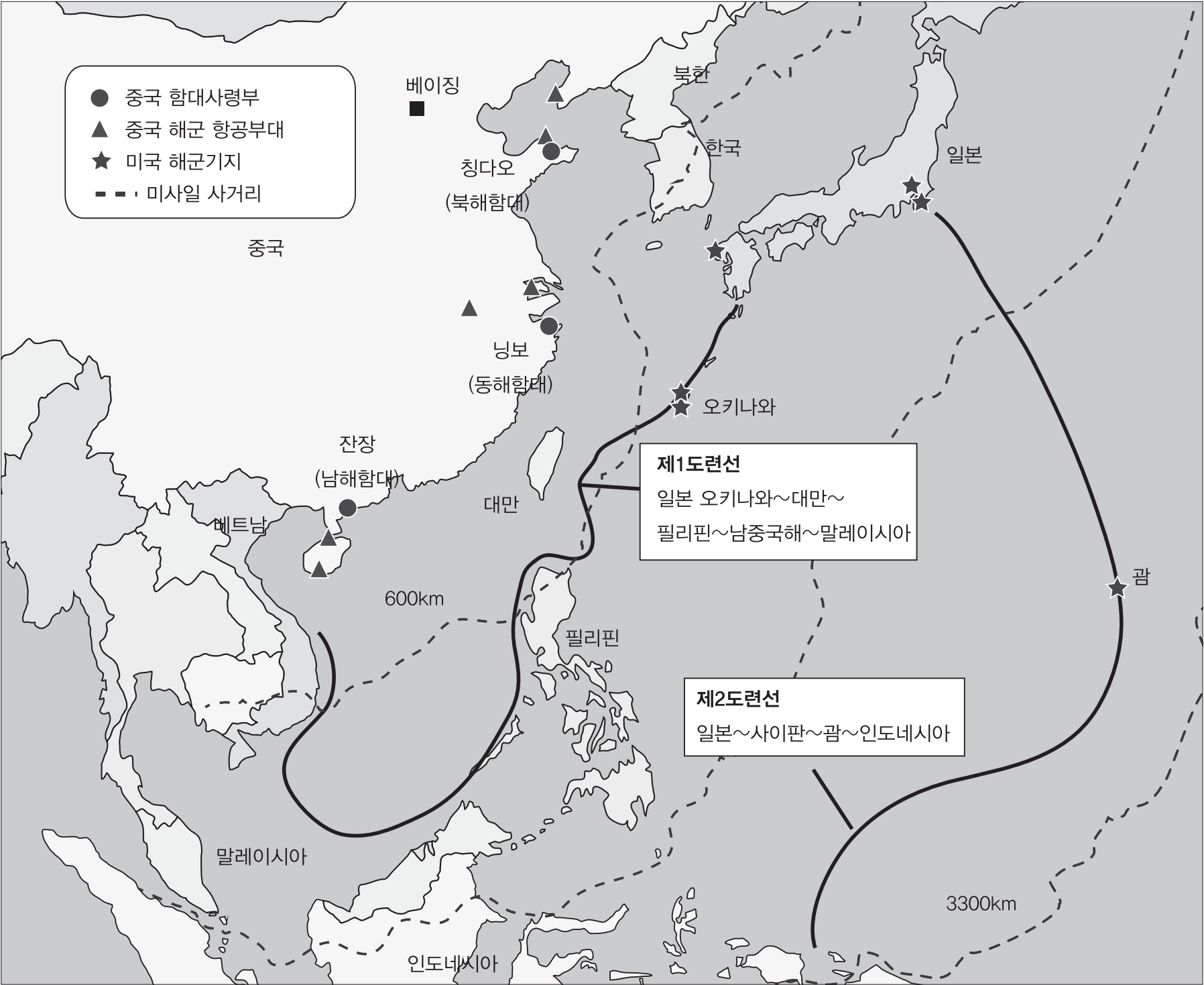
니다. 그 결과, 19세기 말에 이르면 경제적 경쟁과 지정학적 경쟁이 융합됩니다.

당시 최강의 제국주의 국가였던 영국은 경제적 측면에서나 지정학적 측면에서나 다른 경쟁자들의 도전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특히 독일과 미국이라는 신흥 산업국의 부상에 직면했습니다. 20세기 초에 이르러 미국과 독일은 산업 생산 면에서 영국을 앞질렀

습니다. 또한 세계 최강 수준의 해군력을 갖추게 됐죠. 미국과 독일이 세계 최강 수준의 해군력을 보유하게 된 것은 영국에 특히 위협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전 세계의 식민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국의 해군력 덕분이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전반부에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이 일어난 원인은 무엇보다 영국 제국에 대한 지정학적·경제적으로

융합된 도전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1914년 8월 개전한 제1차세계대전의 1백 주년을 기념하는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영국 지배자들은 ‘제1차세계대전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전쟁이었다’는 등 헛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제1차세계대전의 본질은 제국주의 열강들이 세계적 주도권을 놓고 다투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전쟁입니다.



제국주의는 미국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통해서 분명한 결론이 하나 도출됩니다.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제국주의는 어떤 강대국이 나머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국주의는 경쟁과 대결을 특징으로 하는 **체제**입니다. 제국주의는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서로 경쟁하는 **체제**입니다. 레닌도 이 점을 그의 소책자에서 매우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레닌이 강조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레닌이 제국주의에 대해서 말한 것이 당시 현실에 모두 들어맞았던 것도 아니고, 일부는 오늘날에는 낡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레닌은 오늘날에도 들어맞는 매우 중요한 통찰을 보여 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균등 발전’이라는 개념입니다. 달리 말해, 자본주의가 모든 곳에서 똑같은 속도로 균등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자본주의 발전은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발전이 지리적으로 쏠려 있어서 그 수혜자인 강대국들이 나머지 세계에 비교적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의 경제 발전이 가장 앞서 가느냐는 때때로 달라집니다. 자본주의가 워낙 역동적인 체제이다 보니 경제 발전의 순위도 수시로 바뀌는 것이죠.

레닌은 ‘초제국주의론’을 반박하면서 불균등 발전 개념을 날카롭게 제기했습니다. ‘초[지나치다는 뜻]제국주

의론’은 독일 사회민주당의 지도자 칼 카우츠키가 주창한 이론입니다. 카우츠키 초제국주의론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자본의 집적과 집중 과정이 계속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마침내 국경을 초월해 통합된 거대 다국적기업들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 국경을 초월한 이런 경제 통합 과정이 정치에도 반영된 결과, 국가들 사이의 지정학적 갈등은 사라진다.’ 그래서 카우츠키에게 제1차세계대전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토니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가 그들의 공저 《제국》에서 비슷한 사상을 개진합니다.

그러나 레닌은 불균등 발전 때문에 초제국주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균등 발전으로 말미암아 경제 발전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이 계속 바뀌므로 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의 순위가 바뀌고, 정치적으로 강력한 국가의 순위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레닌은 당시로부터 50~60년 전만 해도 독일은 후진국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랬던 독일이 어느 순간 영국을 상대로 세계의 맹주 자리를 놓고 다투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불균등 발전의 결과 앞으로 50~60년 뒤에는 어떤 나라가 세계적 패권 국가가 될지 누가 예상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과정 때문에 국가들 사이에는 안정적이고 영원한 의견 일치가 유지될 수 없다. 레닌은 이런 분석을 독일과 영국의 관계에 적용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이런 분

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건대, 제국주의를 미국의 지배로 환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많은 좌파들이 이 명백한 것을 보지 못할까 하는 의문이 떠오릅니다. 제가 볼 때, 이는 두 가지 착시 효과 때문입니다. 하나는 옛 소련이 사회주의였다는 오해입니다. 옛 소련을 사회주의라고 보니까 냉전 시기에 일어난 옛 소련과 미국의 지정학적 경쟁을 제국주의 간 경쟁으로 보지 못한 것이죠. 그 영향이 오늘날에도 남아서 사람들이 러시아를 그래도 반제국주의적인 국가로 보는 착각이 있습니다.

둘째, 냉전 종식 후 한동안 세계가 단극 체제처럼 보였던 시기의 잔상입니다. 당시에는 미국이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인 듯했고, 그 누구도 미국에 도전할 수 없을 듯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일시적이었고 또 모순됐습니다. 냉전 종식 후 한동안 미국은 군사적으로는 나머지 국가들을 압도했습니다. 미국은 나머지 국가들의 군사력을 다 합한 것보다 더 큰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는 냉전기부터 계속 하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유럽 국가들에 견줘서 그랬고, 나중에는 일본, 마침내는 중국에 견줘서 그랬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가 하락하는 것은 매우 분명하게 보입니다. 특히 경기 침체에서 회복되는 속도가 중국보다 확연히 느려서 더욱 그렇습니다.

미국의 약화와 동아시아 불안정

그 결과 미국의 세계적 주도력은 갈수록 더 많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중동에서 두드러집니다. 2003년 미국은 세계 패권을 더 굳히려고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인들의 저항에 호되게 당하고 패배해 2011년 철군했습니다.

게다가 2011년 아랍 혁명이 일어나면서 중동 지역 국가들은 모두 불안정해졌습니다. 이는 현재 미국이 이라크를 폭격하고 있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지금 미국은 ‘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국가’ ISIS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ISIS는 강경 이슬람주의 수니파 무장 단체입니다. ISIS는 시리아 혁명과 내전의 결과로 시리아에서도 많은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미국이 세운 [말리키] 정권이 매우 부패해 사람들이 그 정권을 혐오하는데, ISIS는 그 틈을 이용해 많은 지역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ISIS는 매우 종파적이고 반동적인 운동입니다. 그런 ISIS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미국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그런데 미국의 장기적 약화는 여러 분야 살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훨씬 더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중국은 최대 규모의 산업국이면서 수출국입니다. 그 결과 국가들 사이의 정치적·경제적 이합집산 구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중국과

의 무역을 늘리고 중국에게서 투자를 받으며 이제 갈수록 중국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지난달 브릭스 국가들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의 신흥경제 4국]이 미국 주도 금융 질서에 대해 자신들만의 개발은행을 설립한 것이 그런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줍니다.

중국은 군비 지출도 급격히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는 매우 구체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미국 해군을 인근 해역에서 밀어내기 위한 것이죠. 미국 해군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로 쭉 아시아·태평양 해역을 장악해 왔습니다. 이것은 갈수록 중국 지배계급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물자를 수출하고 수입하는 해상 운송로는 말라카 해협을 거쳐 인도양으로 이어집니다. 중국 지배계급은 이렇게 중요한 보급로를 미국의 통제에 내맡겨 두는 것을 더는 원치 않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이 보유한 항공모함은 한 척인데, 우크라이나에서 중고로 구입한 비교적 작은 항모입니다. 반면 미국은 핵항모가 열한 척이나 되죠.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항모를 격침시킬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을 아시아 연안 지역으로부터 더 멀리 밀어내기 위해서입니다.

▶ 12면으로 이어짐

▶ 11면에서 이어짐

또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이 많아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베트남·필리핀·일본 등이 연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거의 모든 국가가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현상이 전통적 영토 분쟁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세계화 때문에 이제 더는 국가들이 영토 분쟁을 벌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말이죠. 세계화론의 주장은 사실 일본과 중국이 지명조차 서로 의견 일치를 볼 수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섬[다오위다오 또는 센카쿠열도]을 두고 서로 다투고 있는 현실과 완전히 어긋납니다. 세계 자본주의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동아시아]에서 영토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역에서 세계화가 가장 큰 경제적 성공을 거뒀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이런 무인도들을 둘러싸고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3개 국가가 맞붙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 3위 경제 대국인 일본, 2위인 중국, 1위인 미국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낀 이유는 미국이 일본과 안보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국과 일본 지배계급들이 무인도를 놓고 전쟁까지 벌일 정도로 분별 없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동아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제국주의 간 갈등입니다. 세계 3대 경제 대국들이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고, 거기에 한국을 포함한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도 군비 증강을 통해 가세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동맹 관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컨대 베트남은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 베트남을 폭격하려고 사용했던 기지를 이제는 미국이 중국에 맞서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에 내줄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제국주의 간 경쟁은 또한 세계의 나머지 지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이를 보여 줍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다소 어리석게

도 우크라이나를 서방의 영향권으로 편입시키려 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안보에 아주 중요한 축이라고 보고 우크라이나를 다시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흡수하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에게는 매우 비극적인 일이죠. 우크라이나 국민은 제국주의 간 경쟁으로 희생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자기보다 훨씬 강한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을 상대로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비교적 약한 제국주의 국가입니다. 그런 러시아의 푸틴이 미국과 유럽연합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도록 기를 살려준 요인은 바로 미국의 약화입니다. 푸틴은 오바마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휘말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바마는 무엇보다 중국을 견제하려고 아시아에 집중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중동에서 군사 활동을 줄였습니다. 이처럼, 동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제국주의 간 경쟁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제국주의 간 경쟁도 부추긴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 국가 간 경쟁은 자본 간 경쟁에 통합된다.

제국주의를 체제로서 이해하지 못할 때 범하는 오류 — 진영 논리

이렇듯, 제국주의가 체제로서 갖는 성격을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우 심각한 정치적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냉전 때 많은 좌파가 '진영 논리'를 따랐습니다. 진영 논리는 이렇습니다. '일단의 진보적인 국가들이 있고 제국주의에 대한 평형추로서 그 국가들을 지지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제국주의는 미국을 뜻합니다. 냉전 시대에 이 진영 논리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옛 소련과 그 동맹국들을 지지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옛 소련 자신이 동유럽을 점령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는 등 제국주의적 행태를 보였는데도 진영론자들은 그것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오늘날 진영 논리는 두 가지 서로 연관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를 편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과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를 자신들의 영향권 내로 흡수하려 한 것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달 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지지했습니다. 물론 크림반도가 애당초 러시아의 사실상 식민지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스탈린이 제2차세계대전 종전 뒤 원주민이었던 투르크계 무슬림들을 크림반도에서 쫓아냈었죠. 그러나 제국주의 국가가 자신의 옛 식민지를 되찾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원칙 있는 반제국주의자가 할 말이 결코 아닙니다.

진영 논리가 표현되는 또 다른 방식은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많은 좌파가 아사드 정권을 이스라엘과 투쟁을 벌인 역사가 있는 진보적 반제국주의 정권으로 봅니다. 이것은 헛소리입니다. 아사드 정권은 팔레스타인인들을 매우 악독하게 다룬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두 제쳐 놓더라도, 이 경우에 진영 논리는 자국민을 상대로 종파적 내전을 벌이는 정권을 지지하자는 논리입니다. 시리아 내전에서 아사드는 사실상 ISIS가 성장하도록 부추겼



특정 제국주의에 맞서 다른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1979년부터 9년 동안 옛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다.

습니다. 더 민주적인 혁명적 세력들이 약화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ISIS는 시리아 동부의 유전지대를 장악하고 있는데, 아사드에게 석유를 주고 그 대가로 전력을 공급받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ISIS가 통제를 벗어나 버리니까, 이제 와서 아사드 정권은 미국과 함께 ISIS를 공격합니다. 이른바 진보적 반제국주의 국가가 온갖 냉혹한 책략을 부리다가 결국은 '대악마' 미국과 손잡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혁명가들은 제국주의를 체제로 보며 원칙 있게 반대해야 합니다.

특정 제국주의에 맞서 다른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물론 혁명가들은 특정 제국주의 국가가 벌이는 일에 반대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제국주의는 일방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오늘날 이라크에서 미국은 일방으로 제국주의 세력으로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비록 ISIS가 반동적이지만 이 경우에 주된 악은 미국입니다.

그러나 여러 제국주의들에 반대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런 경우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는 서방의 개입에도 반대해야 하지만 러시아의 개입에도 반대해야 합니다. 여러 제국주의 국가들이 서로 책략을 벌이고 있는 동아시아의 맥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제국주의의 억압을 받고 있는 약소 민족들의 투쟁에도 연대해야 합니다. 현재 제국주의의 억압을 가장 심하게 받고 있는 민족은 바로 팔레스타인인입니다. 오늘 영국 런던에서는 팔레스타인인들에 연대하는 시위가 열릴 예정인데, 최대한 큰 규모로 치러지기를 바랍니다.[런던의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는 15만 명 규모로 크게 벌어졌음이 나중에 보도됐다.]

그러나 이런 갖가지 갈등들을 따로 따로 떼어놓고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갈등들을 레닌이 1916년 아일랜드의 민족해방 운동을 대했던 방식으로 대해야 합니다. 천대반는 민족들의 반제국주의 투쟁을 그 자체로서 목적인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 체제 전체를 끝장낼 수 있는 더 큰 투쟁에 기여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국주의 체제 자체가 우리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천대받는 민족의 저항은 제국주의 체제 전체를 무너뜨리는 투쟁에 기여한다. 1975년 베트남에서 쫓겨 나는 미국.

연사의 정리 발언

‘미국이 조금 더 민주적이면 오바마가 중동에서 좀 더 민주적으로 행동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미국은 도대체 왜 중동에 간섭하는가?’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해군력을 증강하는 것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여기는데, 저는 언제나 이것을 희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물음은 애당초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국주의는 본질적으로 대단히 비민주적입니다. 제국주의는 지배를 본질로 하므로 결코 민주적일 수가 없습니다.

배타성이 제국주의를 낳는가?

어떤 분은 배타성이 제국주의를 낳는다고 말씀했는데요. 저는 배타성이 왜 필연적으로 나쁜 것인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연단 자리를 혼자서 배타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물리적 현실입니다. 물론 통역자가 목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 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마시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나쁜 행동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기적인 짓을 제가 왜 해야 할까요? 걸출한 마르크스주의자 프레데릭 제임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보라.” 즉, 어떤 사건이나 갈등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역사적 배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배타성’처럼 지나치게 폭넓고 추상적인 개념만으로 무엇을 설명하려 한다면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다음으로, 중국과 미국 간의 경제적 경쟁이 왜 제국주의적 갈등으로 발전했을까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독일과 일본은 둘 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뒤 경제적으로는 미국과 경쟁을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미국 밑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런 합의의 틀 바깥에서 떠올랐습니다. 중국 지배자들이 미국의 지정학적 우세를 받아들이л 용의가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국이 새로운 슈퍼파워니 어찌느니 하는 얘기를 하는 책도 많죠. 그러나 그런 책들의 주장과 달리 중국이 처음부터 세계 패권을 노려서 갈등이 빚어진 것은 아닙니다.

중국 지배계급은 세계 패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밀어내고 싶어 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미국 지배계급은 그것을 받아들이 수 없죠.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경쟁이 불안정한 사태를 불러올 필연적 이유는 없습니다. 예컨대 애플의 제품들은 대만 기업이 고용한 중국 노동자들에 의해 중국에서 조립됩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세계 다른 나라들의 원자재를 흡수하는 시장이 되고, 전통적으로 미국 영향권 아래 있던 다른 나라들의 대안적 투자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매우 위협적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보다는 중국 쪽으로 더 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모두 제국주의적인가?

어떤 분이 ‘국가들이 모두 어느 정도는 제국주의적 성격을 갖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 질문이 어느 정도 오해에서 비롯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크라이나가 미국보다 더 약한 제국주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 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향력을 둘러싸고 미국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비교적 약한 제국주의는 러시아입니다. 진정으로 제국주의라고 할 만한 국가는 소수입니다.

경제적·지정학적 경쟁의 논리가 모든 지역에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선 몇몇 국가들이 자기 주변 지역의 야류 제국주의가 되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 주요 제국주의 강대국들에게 그 지역의 강국으로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저는 아랍 국가들이 모두 나름으로 작은 제국주의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중동의 일부 국가들이 야류 제국주의가 되고자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컨대 터키·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가 그렇습니다.

한국의 미국의 식민지인가?

저는 남한이 미국의 식민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한에는 남한 자본주의를 운영하는 꽤나 강력한 자본가 계급이 있고 그들은 세계적 수준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한이 북한과의 갈등 때문에 지정학적으로는 미국에 묶여 있기는 합니다. 북한 지배계급이



사진: kashipho.com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서도, 제국주의 체제 전체를 물리치기 위해서도 팔레스타인 연대는 사회적으로 중요하다. 8월 8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북한 지배자들이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하려고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약소국의 지배계급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약소국 입장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실제 사용할 것처럼 굴면 다른 강대국들을 상대로 효과적인 협상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소국이 제국주의를 꺾을 수 있나?

약소국이 제국주의를 꺾을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베트남은 미국을 패퇴시켰습니다. 중요한 단서를 하나 달아야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이 미국에 맞서 승리할 수 있었던 데는,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시절부터 45년 동안 벌인 끈질기고 영웅적인 투쟁이 한몫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민중이 그들만의 힘으로 미국을 꺾은 것은 아닙니다. 국제연대가 사회적으로 중요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국제 연대는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거대한 대중 운동이었습니다. 그 반전운동은 미국 노동계급이 경제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던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미국 흑인들이 인종차별에 맞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일어난 이런 저항들이 베트남 민중의 항쟁과 결합되면서 미국을 패퇴시켰습니다.

그러나 미국 제국주의는 패퇴시켰지만 체제[자본주의 체제]를 패퇴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날 베트남은 여전히 공산당이 통치하는데, 저렴한 노동력으로 저렴한 공산품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팔레스타인 해방은 어떻게 가능한가?

팔레스타인 해방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군사적·경제적 힘으로 볼 때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의 상대가 안 됩니다. 물론 지금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는 투쟁을

보면, 비록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더디겠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을 지치게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패퇴시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엄청난 희생이 따를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해방에 관한 국제사회주의경향의 입장은 항상 다음과 같은 구호로 요약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카이로를 통한다.” 달리 말해, 팔레스타인의 해방은 아랍 지배계급들에 맞선 사회 혁명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혁명은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지를 훑듯 보여 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날 이집트 혁명이 일시적 패배 국면에 있는 것은 그것이 역으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격할 자신감을 얻은 요인 하나는 이집트의 군부독재자 엘 시시가 가자 지구를 봉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서는 아랍 세계의 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오로지 아랍 노동계급의 힘만이 이스라엘을 꺾을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연대의 가능성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신자유주의 하에서 개인주의가 팽배해 연대가 힘들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연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새로운 연대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을 지지하는 국제 연대는 몇십 년 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졌습니다. 영국에서도 팔레스타인인들에 연대하는 수많은 집회들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이런 현상을 설명한다면서 이스라엘 지지자들은 모종의 유대인 배척이 뒤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에는 유대인 배척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배계급이 왜 온 세계가 이스라엘에 적대적이고 팔레스타인에 우호적이냐는 물음에 답을 찾고 싶으면 거울을 들여다 보면 됩니다.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연대는 새로운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BDS[보이콧, 투자 회수, 제재를 뜻하는 영어 낱말의 머리글자를 딴 운동] 운동의 성장에 관해 누군가 말씀하셨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를 중단하고 이스라엘을 제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도 연대가 살아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런 연대는 과거 운동들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영국 정부는 의회에서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안을 통과시키려다가 반대표가 많아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에 일어난 거대한 반전 운동의 유산이기도 하죠. 이런 연대는 사회적으로 중요합니다. 연대가 커질수록 팔레스타인인들이 스스로 해방을 이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인류 모두가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될 힘이 강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천 책

제국주의와 국제 정치경제

알렉스 캘리니코스 지음, 천경록 옮김, 책갈피, 20,000원, 400쪽

진보 교육감 시대, 교육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정원석 전교조 조합원

지독한 교육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그들은 진보 교육감이 박근혜의 신자유주의 교육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고 교육을 실질적으로 바꿔 주기를 바란다. 새로운 교육에 대한 대중의 염원이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으로 표출된 것이다.

실제로 진보 교육감들이 약속한 정책들은 제대로 실행된다면 교육에 변화를 가져올 것들이 많다. 무엇보다 경쟁 교육과 임시 고통을 완화하고, 교육 불평등도 줄이고, 교육 복지를 확대하는 것에 기대가 높다.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학교를 혁신하는 것, 친일독재 교과서를 반대하고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핵심 공약들이다. 이 외에도 인사제도와 교육청 관료 시스템을 개선하고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완화하는 등 더 나은 교육을 위한 공약들이 실현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지배자들은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으로 신자유주의 교육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길까 봐 불안해 한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과 우익은 교육 개혁에 대한 대중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또 전교조를 탄압하고 진보 교육감 흔들기에 나섰다.



7월 12일 전교교사대회.

박근혜 정권이 교육을 통제하려 애쓰는 이유

정권이 교육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자본주의에서 교육이 하는 구실 때문이다. 교육제도는 자본주의 산업에 필요한 노동계급을 양성하는 핵심 장치 중 하나다.

그래서 교사들의 노동이 지배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지배자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 숙련 노동력 인구를 양성할 뿐 아니라 체제를 정당화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심어서 체제에 순응하는 노동자를 만들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배자들에게 교사 통제는 사활적인 문제다. 1989년 전교조가 결성될 때부터 지금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될 때까지 정권의 탄압이 끊이지 않은 이유다.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자본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그래서 경쟁력 있

는 노동력 공급을 위해 교육에 투자도 하지만, 동시에 교육 통제도 강화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박근혜 정부는 시간제 교사, 교원평가-성과급-근무평정 일원화, 특권학교 확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교육 민영화, 공무원연금 개악 등 신자유주의 교육 공격을 마구 퍼붓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와 진보 교육운동 진

영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지금, 진보 교육감의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투쟁도 첨예해질 공산이 크다.

따라서 진보 교육감 시대에 보수교육 지지자들과 진보교육 지지자들은 일대 결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교육을 둘러싼 계급 간 전투의 일부다.

진보 교육감들의 첫 시험대가 된 자사고

1기 교육감들은 무상급식을 도입하고, 혁신학교를 만들고, 학생인권을 신장하고,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 줬다.

그와 동시에, 진보 교육감들 사이에서도 개혁성과 진보성에 편차가 있었다. 일제고사는 그 점을 확인해 주는 첫 시험대였다.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고 일선 학교에 대해 프로그램 마련을 지시했다.

반면, 또 다른 진보 교육감들은 때때로 흔들리고 후퇴하면서 실망을 자아내기도 했다. 가령,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박노현 서울교육감은 우파적 압력에 오락가락하거나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고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심지어 일제고사 필요성 자체를 인정한다고 고백했다.

1기는 진보 교육감 당선만으로 교육 개혁이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진보 교육감 1기가 초기에 일제고사와 교원평가로 시험대에 올랐다면, 진보 교육감 2기에서는 자사고 폐지와 전교조 법외노조가 첫 시험대가 되고 있다.

요즘 첨예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한 자사고 존폐 문제는 '특권교육 대 평등 교육'이라는 교육의 철학적 가치와 방향이 충돌하는 문제로, 사실상 진보교육 진영과 보수교육 진영이 겨루는 1라운드라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진보 교육감이 교육 생태계에서 '큰빛이끼벌레'와도 같은 자사고를 제거해 주기를 바란다. '고교서열화'와 '일반고 슬럼화'의 주범 중 하나가 자사고이기 때문이다.

뒷걸음질

그러나 안타깝게도 진보 교육감 지역인 강원, 부산, 전남, 충남에서 자사고가 재지정됐다. 광주에서는 학생선발권을 사실상 없애는 조건으로 자사고가 재지정됐다. 이정연 인천교육감은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추가 지정은 반대하지만 이미 운영 중인 자사고와 설립이 허가된 포스코 자사고는 취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안산 동산고에 대해 재지정 불가 입장을 밝혔다가, 나

중에 "재지정 여부는 교육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후퇴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자사고를 비판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3차 종합평가를 10월까지 진행하고 지정 취소 적용을 1년 유예하는 쪽으로 한 발 물러섰다. 1, 2차 평가만으로 14개교 모두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불필요한 후퇴다.

그러자 자사고 교장들은 '조희연 식 자사고 평가는 인정할 수 없다'며 들고 일어났고 자사고 학부모들은 시위와 농성을 벌였다. 서울 25개 자사고 동문회들까지 나섰다. 교육부는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교육부와 협의의 사항이라며 진보 교육감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진보 교육감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이런 식의 충돌과 갈등이 벌어지고, 진보 교육감들이 교육 개혁 목표와 현실 사이에서 동요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교육 혁신을 이룰 수 있는가?

먼저 정부와 우파의 공격에서는 일단 진보 교육감들을 방어해야 한다. 진보 교육감 공격은 단지 교육감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교육감을 배출한 진보 교육운동 진영과 진보 교육감에게 투표한 지지자 모두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이다.

지난 1기를 사례로 든다면, 2010년 김승환 교육감이 법정 재단 전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두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그러자 교과부는 '자사고지정 취소 처분 시정명령'을 내렸고, 해당 재단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역 우파들은 사생활 문제까지 거론하며 온갖 악선동을 일삼고 김승환 교육감 사퇴를 요구했다.

우파들의 진보 교육감 흔들기는 갈수록 거세져 보수언론의 비난뿐 아니라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보수 정당이 주도하는 도의회와 지방정부는 진보 교육감을 넘어뜨리려 했다.

급기야 광노현 교육감은 사후매수죄라는 죄를 뒤집어쓰고 국가 탄압의 제물이 됐다. 김상곤 교육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학재단에 거액의 장학기금을 출연했다는 등의 이유로 사무실 압수수색과 기소를 당했다.

진보 교육감 2기인 지금도 비슷한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 충북의 예만 들자면, 도의회에서 진보 교육감이 추진하고자 하는 혁신학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심지어 검찰이 충북교육감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런 정부와 우파의 공격에 맞서 진보 교육감들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것이 진보진영의 첫째 과제다.

그러나 방어가 반드시 무반작용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우파는 진보 교육감을 위협하는 동시에, 그들을 길들이려 한다. 2기 진보 교육감들은 보수적 압력과 진보적 압력 사이에서 끊임없이 동요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다수의 진보 교육감들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개혁'을 말했다. 그러나 좌우를 아우르는

진보 교육감 당선이 낳은 기회를 활용해 대중 투쟁 건설하기

전교조가 진보 교육감과 충돌을 피하고 단순한 협력 관계를 맺어야 '전교조도 살고 교육감도 산다'는 주장은 근시안적 단견이다.

경기지부는 이런 오류와 편향을 경험한 사례 중 하나다. 진보 교육감의 성공을 위해 진보 교육감에게 무비판적으로 협력하려는 태도는 투쟁을 자제하도록 하는 경향을 낳았다. 그래서 종종 진보 교육감의 후퇴와 동요에 무기력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전교조가 교육청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노동조합의 손발을 교육청에 묶어 두면서 노동조합의 진정한 힘인 조직력과 투쟁력이 약해졌다.

한편 전북에서는 교원평가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라는 전교조 지부의 강력한 항의와 농성이 있었고 그 결과 최초로 서술형이 도입됐다. 이에 고무받은 경기지부도 간만에 단식 농성을 했고 교원평가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강원에서는 초등학교 일제식 평가를 폐지한 성과를 거뒀다. 진보 교육감이 타협적이 될 때 지부가 단호한 점거 농성으로 맞선 덕분이었다. 이런 사례는 진보 교육감 2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진보 교육감은 교육 개혁의 기회를 열어 주는 한편, 전교조의 투쟁을 제한하거나 온건화 압력을 가하는 모순된 구실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보 교육감의 구실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전교조의 구실이다.

진보 교육감의 교육 정책은 교육부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 많다. 앞으로 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간제 교사 도입, 교원평가와 성과급 문제 등 첨예



사진 출처 (교육평론가)

진보 교육감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독립적으로 투쟁해 개혁을 성취한 전교조 전북지부 2011년 교원평가 반대 농성.

한 켠점이 불거질 때마다 진보 교육감은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진보 교육감 시대에 교육 개혁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느냐 여부는 전교조가 아래로부터의 독립적인 운동을 건설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전교조의 구실

위대한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이자 활동가였던 크리스 하먼은 이렇게 말했다. “좌파 정부의 출현이 노동자 운동을 강화시키는 경우는 오직 노동계급이 나 적어도 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문이 이 정부에 대해 착각하지 않는 경우뿐이다. 노동자 운동이 독립적이고 강력할수록 좌파 정부에게서 더 많은 개혁을 얻어낼 수 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가 진보 교육감에 대한 환상을

갖고 의존하기보다는 진보 교육감의 모순과 한계를 간파하고 독립적인 운동을 벌여나갈 때 교육 개혁이 실현될 것이다. 그래서 진보 교육감 시대 전교조의 운동은 독립적이고 강해져야 한다. 노동조합 자신의 행동, 즉 독립적인 운동이 아니라 교육감과 교육청에 의존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개혁은 초라해 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진보 교육감의 행보야 어떻든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된다’는 식의 비정치적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진보 교육감들과 그들의 정책은 대중 의식과 운동에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 따라서 선거 공약을 지키도록 촉구하는 운동을 벌이고, 무엇보다 진보 교육감 당선이 열어 놓은 기회를 활용해 대중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혁신학교의 성과와 한계

진보 교육감 시대, 교육 혁신을 이룰 때 빠뜨릴 수 없는 쟁점 하나는 ‘혁신학교’다. 혁신학교가 진보교육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면서 많은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기대와 열망이 크다.

혁신학교 1기는 신자유주의 교육에 하지만 의미 있는 파열구를 내고 진보교육의 한 가지 상을 보여 줬다. 성공적인 혁신학교는 민주적 학교운영과 학교자치, 학생인권과 학생자치, 교원업무 경감, 학교를 업무 조직에서 교육조직으로 재구조화, 전문적 학습공동체, 교육과정과 수업 혁신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고 이는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혁신학교 운동에 관해 두 가지 편향된 시각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혁신학교를 다른 교육 운동과 투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혁신학교는 그 한계가 분명하므로 교육운동으로서의 효과가 별로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혁신학교는 성과와 한계가 동시에 있다. 따라서 혁신학교의 성과를 확대하고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혁신학교 실험을 지지하면서 학교 혁신과 교육 구조 개혁을 위한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사실 학교 혁신 운동이 없다면 혁신학교는 제한된 실험에 그칠 것이고, 또 교육 구조 개혁 투쟁이 없이는 학교 혁신도 한계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10년 동안 ‘배움의 공동체’ 학교가 1천여 개로 성장했지만, 그 기간에 일본 교육 전반은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더 나빠졌다. 마찬가지로, 혁신학교 확대가 경쟁 교육 체제를 자동으로 없애지는 못한다. 때문에 혁신학교가 투쟁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만 투쟁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일부 학교에 제한된 실험들로 노동자와 서민에게 진정한 희망을 제공하기는 힘들다. 현재의 학교 교육을 현저하게 개선하려면 정규 교원을 대폭 확충하고, 모든 교사들이 자신의 열정과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혁신학교뿐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대폭 감축하고,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행정 지원 인력을 늘려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교육 예산을 확충하도록 운동을 건설하고 교육 내용과 방식을 통제하는 국가의 교육 정책과 교육당국의 교사 통제에 맞서야 한다.

혁신학교가 바라는 ‘모든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 제공이라는 이상을 실현하려면, 고교평준화와 대학평준화를 통해 평등교육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유아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혁신학교와 학교 혁신 운동과 같은 학교 단위 개혁 운동은 정책과 제도를 바꾸는 근본적인 교육 개혁 전망과 연결되어야 한다.

교육 개혁과 투쟁의 변증법

‘전교조가 투쟁하면 교육 개혁이 실패할 것’이라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김의겸 〈한겨레〉 논설위원은 전교조가 “투쟁을 하면 소중한 교육 개혁의 기회를 망칠 수 있으니, 탄압을 하든 구박을 하든 교실의 학생만 보고 묵묵히 교육 개혁”에 힘쓰라고 주문했다. 또, 교육평론가 이범 씨는 “전교조가 투쟁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면서 “투쟁이 아니라 ‘수업 혁신’과 같은 ‘교사의 윤리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투쟁과 교육 개혁, 투쟁과 참교육 실천을 대립시키는 것은 실용주의적 단견이다. 참교육을 현실화하는 힘은 투쟁에서 나오고 교육 개혁의 성과는 투쟁이 성장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갈망하는 참교육은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교육과 경쟁 교육이 아닌,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교육을 가리킨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 제도와 정책에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교조는 “교육 개혁”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개혁의 원동력

지난 역사와 경험이 보여 주듯이, 투쟁 없이는 작은 개혁조차도 이루기 어렵다. 전교조가 투쟁을 자제한다면 박근혜 정권은 그동안 전교조

와 진보 세력이 피땀으로 이룬 교육 개혁의 성과들을 허물어뜨릴 것이다.

게다가 진보 교육감 시대를 맞았지만 아직 ‘교육자치’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하다. 교과부의 ‘권한 이양’으로 시·도교육감의 권한이 예전보다 커지긴 했지만 여전히 핵심 권한은 교과부가 틀어쥐고 있고, 국가는 시·도교육감을 압박할 다양한 수단을 지니고 있다. 진보 교육감이 교육부에 반기를 들 때마다 직무이행 명령, 직무유기로 고발, 감사, 교육청 평가, 예산 차등 지급 등 압력이 거세다.

전북교육청이 교과부의 교원평가제를 거부하고 서술형을 도입하자 교육부는 교육감을 상대로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이어 전북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는 진보 교육감의 교육 개혁 노력을 국가가 허물어 버릴 수도 있음을 보여 준 사건이다.

진보 교육감의 대거 당선은 현행 지배 엘리트들의 교육 정책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 시작됐다는 뜻이다. 그러나 진보 교육감에 의존하느라 국가 교육 시스템을 바꾸는 더 큰 투쟁을 놓쳐서는 안 된다.



진보교육

입시 경쟁에 내몰린 청소년들.

교육을 바꾸는 투쟁과 사회를 바꾸는 투쟁은 연결돼야

교육의 모순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롯한다. 경쟁 교육은 경쟁적 축적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 체제의 논리에 따른 필연적 결과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를 경험하듯이, 학생도 자본주의 교육 속에서 소외를 경험한다. 자본주의 교육이 ‘다양성’과 ‘창조성’을 표방하지만, 현실의 교육은 공장화 사무실의 노동처럼 획일적이고 지루하고 고되다. 그 이유는 교육의 목적이 ‘전인적 발달’이 아니라 ‘이윤 창

출의 수단인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교육 불평등은 학교 밖 현실의 불평등이 반영된 결과인데, 교육이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당화하는 구실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더 나은 학교, 더 나은 교육을 위한 투쟁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투쟁의 발전과 한 운명이다. 교육을 바꾸는 투쟁과 사회를 바꾸는 투쟁은 연결돼야 한다.

개혁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종종 개혁의 후퇴를 의미한다.

우리는 진보 교육감이 신자유주의 특권·경쟁 교육과 단호하게 결별하고 정부와 우파에 맞서 싸우라고 촉구해야 한다. 진보 교육감들 자신도 선거 때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잘못된 정부에 복종하는 교육감이 아니라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신을 뽑아 준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타협적이거나 실용주의적 행보를 보인다면, 진보교육 지지자들은 공개적 비판을 삼가서는 안 된다.

전교조 조합원 중에는 진보 교육감의 성공을 곧 전교조의 성공과 동일시하면서 ‘진보 교육감을 비판하면 우파가 득을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전교조가 진보 교육감들의 잘못에 침묵한다면 오히려 진보 염원 대중은 진보 교육감뿐 아니라 진보 교육운동 진영 자체를 불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우파가 득세하는 길을 열어 주게 될 것이다.



투자활성화 대책

부자 감세, 민영화 공격을 더욱 강화하는 박근혜 정부

강동훈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경기 부양을 적극 추진하면서 '확장적 거시 정책'을 펴겠다고 발표했다. 뒤이어, 8월 6일 세법 개정안을, 8월 12일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놔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가 경기 부양에 힘쓰는 것은 세월호 참사 정국에서 빠져나오려는 의도도 있을 테지만, 더 중요하게는 세계 경제 상황이 다시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독일 경제는 올 2분기에 0.1퍼센트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12년 이후 최저치다. 그동안 EU 경제를 이끌어 온 독일마저 침체에 빠진다면 마치 잠잠해진 것처럼 보이는 유럽의 재정·금융 위기가 다시 한번 분출할 수 있다.

일본도 아베노믹스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올 4월에 소비세율이 5퍼센트에서 8퍼센트로 인상되면서, 올 2분기 일본 경제는 전(前) 분기에 견줘 1.7퍼센트(연율 6.8퍼센트)나 축소됐

다. 2011년 3월 대지진 발생 이후 가장 큰 후퇴다. 게다가 일본은 수출마저 0.4퍼센트 감소했다. 일본 노동자 임금도 지난해 2분기에 견줘 2.2퍼센트 줄어 소비는 더욱 감소할 공산이 크다.

중국에서도 7월 들어 산업생산, 소매 판매, 투자가 예상만큼 늘지 않아, 중국 정부가 추가 부양책을 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추가적인 부양책은 중국의 부동산 거품을 더욱 키울 것이다.

이 같은 세계 경제 불안정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세계 경제 위기로 한국 경제가 타격을 받기 전에 어떻게든 경기 부양을 해 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면서도 정부는 임금을 낮추고 서민 증세를 해 경제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고 있다. 따라서 경기 부양책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서민은 득 볼 것이 없다.

게다가 경기 부양책의 대부분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품을 키워 오히려 한국 경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은 '재벌들의 소원 수리'다.

확장적 거시정책? = 신자유주의적 양적완화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지난해 추경 편성에 버금가는 재정을 투입하겠다"며 41조 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책을 내놔다.

그런데 41조 원 중 정부 재정 지출 확대는 11조 7천억 원밖에 안 된다. 나머지 29조 원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을 이용해 민간 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재정 확대라는 것도 실제로는 대출 확대와 마찬가지로 주택 구입·건설이나 기업 투자에 대해 주택

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약 9조 원 늘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지출이 실제로 늘어나는 것은 2조 8천억 원뿐이다.

결국 최경환 경제팀의 '확장적 거시 정책'이라는 것의 실체는 '한국판 양적완화'인 셈이다. 미국·EU·일본 등은 중앙은행이 직접 채권을 매입해 돈을 푸는 것이라면, 한국은 금융 공공기관들을 동원해 기업 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돈을 푸는 것이다. 최경환은 한국은행에도 금리

인하를 요구했고, 결국 한국은행은 46개월 만에 금리를 2.5퍼센트에서 2.25퍼센트로 낮췄다.

이는 2008년 위기 이후 전 세계에서 강화되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들의 일환이기도 하다. 미국·영국·EU 등도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양적완화로 막대한 돈을 푸는 동시에, 정부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거나 축소하는 긴축 정책을 쓰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노동자·서민은 긴축 정책으로 복지가 삭감되면서 큰

고통을 받는 반면에, 기업들은 양적완화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나 한숨 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양적완화는 새롭게 자산 거품을 만들면서 더 큰 위기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기업들의 대형 건설 사업을 부추길 뿐 아니라, DTI(총부채상환비율)·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완화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 경제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 공산이 크다.

서비스업 육성? = 민영화

박근혜 정부는 투자를 활성화한다며, 보건·의료·관광·콘텐츠·교육·금융·물류·소프트웨어 등 7대 서비스산업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병원의 영리회사 허용, 제주도 영리병원 유치, 외국의료기관 외국 의사 기준 철폐, 메디텔(의료호텔) 기준 완화, 건강기능식품 판매, 보험사 외국환자 유치 허용 등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 온 의료 민영화 정책이 총망라됐다.

학교 앞 호텔 허용, 카지노 등을 포함하는 북항리조트 개발 지원, 산지관광특구 지정과 케이블카 건설, 한강 개발 등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이름의 대규모 건설 사업을 벌이고 환경을 파괴하는 정책도 포함됐다.

사실상 의료 민영화, 환경 파괴, 그리고 도박산업 육성을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들은 전에 한 번씩 논란이 됐던 내용들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훨씬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최경환은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의견이 다르다면 열띤 논쟁을 주저하지 않아야 하고 장애물이 있다면 돌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대가 있더라도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노동자 연대〉가 지난 호 1면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경제 정책은 빚 좋은 개살구도 안 된다"는 것이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밝히 드러났다.

의료, 교육, 환경 등 공공성을 파괴해 기업의 이윤을 보장해 주고, 부자 감세와 노동자 증세로 경제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박근혜 정부의 공격을 좌절시켜야만 노동자·서민의 삶을 지킬 수 있다.

가계 소득 증대 정책? = 부자 감세, 서민 증세

박근혜 정부는 가계 소득 증대로 내수를 늘린다고 하며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말로는 가계 소득 증대를 내세웠지만, 그 실체는 부유층의 소득을 늘려주는 '제2의 부자 감세'다.

기업이 쌓아둔 과다한 사내유보금을 투자와 임금, 배당 등에 쓰게 하겠다며 마련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당기순이익의 20~40퍼센트를 임금 인상이나 배당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 기업의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은 21퍼센트 정도 된다. 즉, 세제 기준을 20퍼센트로 해 버리면 대부분

의 기업이 환류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깎아 준 법인세만 모 두 28조 원, 연평균 5조 6천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2천억 원 정도 세금이 견힐 것으로 예상했다. 법인세를 깎아 준 것에 견주면 새 발의 피인 것이다. 게다가 이 세금은 당장 부과되는 것도 아니다. 3년간 투자와 배당 여부를 보고 2017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7년은 박근혜 정부 말이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된다는 보장도 없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나 근로소득 증대세제 역시 의미 없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봤듯이 배당이나 임금을 크게 늘려야 할 대기업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설사 배당을 늘린다고 해도 그 혜택은 재벌 총수 같은 대주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르면, 소액주주는 배당소득 세금을 현행 14퍼센트에서 9퍼센트로 깎아 주지만, 대주주들은 세율이 31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내린다.

배당은 대주주들이 훨씬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에게 2백억 원, 정몽구 회장에게 1백억 원을 나눠주는 세계 개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삼성처럼 상속을 앞두고 현금이 절실한 필요한 재벌에게 이번 세법 개정은 가뭄에 단비가 될 것이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서민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담뱃세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고, 평균 4천6백20원인 주민세를 1만 원 이

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연금을 공격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는 국민연금 공격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없애기로 했다. 세금 우대혜택이 없어지면 세율이 9.5퍼센트에서 15.4퍼센트로 대략 6퍼센트포인트가 올라간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가입 한도는 1천만 원이어서 이자를 후하게 3퍼센트로 쳐도 이자소득은 30만 원밖에 안 되는 데 말이다.

결국 노동자들의 30만 원 이자소득에는 세율을 6퍼센트포인트 올리고, 재벌 총수의 1천억 원 배당소득에는 세율을 6퍼센트포인트만큼 내리는 셈이다.

세월호 참사 책임 규명에 진지해야

최근 검찰이 사망한 세모그룹 전 회장 유병언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 개인에게 거의 모든 책임을 돌리고, 진실과 자신의 책임을 은폐하려 대대적인 ‘검거 쇼’를 벌인 박근혜 정부는 체면을 구기게 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야합한 ‘짜퉁 특별법’ 통과도 결국 무산됐다. 박근혜의 국면 전환 시도가 뜻대로만 흘러가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짜퉁 특별법’의 골자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임명한 특검에 진상규명 책임을 맡기고, 조사위원회에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30여 일 동안 곡기까지 굶으며 항의한 유가족의 염원을 완전히 짓밟은 것이다.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총회를 열어 야합을 거부하고 계속 싸우기로 결정했다. 유가족의 단호한 태도에 지지가 이어졌다. 한신대 학생들은 박영선 의원 사무실을 점거했다. 유가족의 입장을 지

지하는 선언과 기자회견이 잇따랐다. 8월 9일 광화문 광장 집회에도 수천 명이 모였다. 두 당의 야합은 사람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큰 분노에 직면한 새정치연합이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을 파기하기로 결정했지만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듯하다.

8월 12일부터 시작된 ‘416 농성’에는 영화계·종교계·학계 등 다양한 부문의 참가가 이어지고 있다. 하루 평균 1백50명이던 농성자 수는 1백 명 넘게 늘었다. 용산 참사 유가족과 쌍용차 해고 노동자 등 무자비한 국가 폭력에 고통받은 사람들과 건설·언론 노동자들도 함께 나섰다.

교황방한준비위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내쫓을 순 없다”며 광화문 시복미사 날에도 유가족 농성장 철거를 요구하지 않고 유가족들의 투쟁을 존중하기로 한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기로 한 것도 관심을 높이고 있다.

교황은 한국에 도착해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첫 마디를 꺼냈다.

저들만의 ‘골든타임’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희생자들을 잊은 지 오래고, 국면 전환에만 혈안이 돼 있다. “유가족 뜻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던 박근혜의 말은 위선이었을 뿐이다. 새누리당 안홍준은 단식 중인 유가족들에게 “제대로 단식 했으면 벌써 실려가야 했을 것”이라며 막말을 했고, 국회의장 정의화는 더는 국회 농성을 허용할 수 없다며 협박했다.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연좌에 돌입한 유가족들을 경찰이 우악스럽게 끌고가다 유가족이 실신하는 일도 벌어졌다.

최정환을 경제부총리에 앉혀 ‘서민 살리기’로 포장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자 박근혜는 8월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실상 세월호 특별법을 빨리 정리하고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재촉했다.

7·30 재보궐 선거에서 새정치연합

이 극단적 소심함 때문에 패배한 것을, 새누리당은 ‘민생 경제를 살리라는 뜻’이라고 선전한다. 우파 언론들은 세월호 특별법안 때문에 경제 활성화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호들갑을 떨며 거든다. 이들에게 ‘민생’은 서민 생계를 뜻하는 게 아니라 재벌의 이윤 획득을 뜻한다.

2기 내각의 경제활성화 대책을 뜯어보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일으킬 것이라는 의료 민영화를 비롯해 각종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득하다.

7월 22일 민주노총 소속 일부 노동조합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의료 민영화 저지,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분쇄 등 노동자 계급의 당면 요구를 함께 내놓고 하루 동맹 파업을 벌였다.

조직 노동자 운동 전체가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파업과 시위 행동을 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양보를 얻어 내는 결정적 힘이 될 것이다.

‘새누리정치연합’이라는 당명이 더 어울릴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박영선은 비대위원장이 되자마자 “투쟁 정당의 이미지를 벗겠다”고 선언했다. 제대로 투쟁한 적도 없으면서 말이다. 그러더니 이를 만에 새누리당과 ‘짜퉁 특별법’을 합의해 버렸다.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라는 박영선은 공감하기는커녕 유가족들의 뒤통수를 쳤다. 새누리당과의 야합에 거세게 항의하는 유가족에게 “미리 설명하면 언론에 포커스가 돼 협상 타결이 안 된다”, “대책회의, 가족대책위랑 의논하는 순간 협상이 안 된다”며 구차한 변명만 늘어 놓았다.

유가족들이 “선거에 유가족 이용하고 선거 끝나니 내쳤다”고 새정치연합 측에 울분을 표하는 것도 당연했다.

종잇장 한 장

새정치연합 의원총회가 합의안 파기를 결정한 후에도 박영선은 “우리도 일반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봤다. … 실제 내 생각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야당에도 많지만 말을 하고 있지 않을 뿐”이라며 뻔뻔스럽게 변명한다. 그러나 앞선 여론조사에서도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53퍼센트였다.

도통 믿을 수가 없는 ‘야당’이다. 지지자들에게서조차 “제2야당”, “새누리정치연합”이라는 비난을 듣는 것이 이상할 게 없다.

새정치연합은 세계의 모든 자본주의 개혁 지향 정당처럼 신자유주의 강화에 직면해 날이 갈수록 무원칙한 실용주의·기회주의 정치세력이 되고 있다.

게다가 소심하기 짝이 없는 그들은 국정원 및 박근혜 정부와 정면 승부를 벌이는 모양새를 취하다가 불뚝이 튕지도 모른다는 염려도 했을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을 양보하고 경제 활성화 법안 일부 처리에 합의한 것에서 보듯이, 세월호 참사 책임 규명보다 친기업 경제 살리기를 더 중시한다는 점에서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과 종잇장 한 장 차이밖에 없다.

김지윤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한 달 넘게 단식 농성 중인 유인 양 아버지 김영오 씨.

왜 수사권·기소권을 포기해선 안 되나

한 유가족은 수사권·기소권 없이 조사가 활동하는 것은 해경이 “애들 구경만 하고 구조 안 한 것과 똑같다”고 일갈한다.

의혹은 쏟아지지만 진실과 책임은 없다. 이것이 지난 4개월간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바탕으로 89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여서 세월호 경영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부의 구조 의지 결여 사실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해경 지휘부는 선내에 4백50명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형 경비정 한 대만 보냈음이 드러났다. 사고 현장에 맨 먼저 도착한 123함정은 이제까지의 거짓말과는 달리 퇴선 유도 방송을 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심지어 수십 년을 경비정에서 근무한 부정장조자 침몰 선박 구조 훈련 경험 없이 있을 정도로 안전을 위한 준비는

전혀 없었다. 헌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했어야 했던 국가 수반의 묘연한 7시간 행적도 밝혀져야 한다.

새누리당 이완구는 피해자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자력구제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문명사회에서 가당치 않은 일”이라며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참사의 책임자들이 스스로를 수사하는 것은 말이 되는가?

법학자 2백29명은 “헌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기소권과 수사권

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의 “사법체계 수호” 변명에 일침을 놓은 것이다. 서강대 이호중 교수는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는 “사회적 정의와 필요성에 따라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단내리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유가족들의 요구대로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가 충분한 기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무죄 — 드러난 ‘사상 재판’의 실체

사상 탄압 중단하고 관련자들을 무죄 석방하라

8월 11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 음모”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로,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상 이적 혐의는 유죄로 선고했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9부는 내란 음모의 주체라 할 “RO” 조직의 실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음모의 주체가 없으니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증명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검찰은 내란을 실제로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증거를 재판에서 내놓지 못했다. 2013년 5월 12일 회합 ‘녹취록’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총 8백여 곳을 위조한 것이 드러났다.

재판부의 판결은 박근혜 정부의 “내란 음모” 소동이 사실은 정치적 마녀사냥일 뿐이었다고 인정한 셈이다.

“내란 음모”로 잡혀갔는데 내란 음모의 증거가 없다면, 구속자들은 모두 무죄 석방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피고인 측 변호인인 김철준 변호사도 재판 후 바로 이 점을 지적했다.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한다, 그리고 조직원들이 사전에 준비 행위를 했다, 폭동을 모의하기 위해 모였고, 내란을 합의했다는 것이 [내란 음모와 선동죄 기소] 핵심적인 기둥이었는데요, 내란음모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4개의 기둥에 대해서 ... [2심] 재판부는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내란 선동도 무죄로 봐야 [합니다.]”(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그런데도 재판부는 내란 선동죄와 국가보안법은 유죄라고 판결한 것이다. 결국 구속자들은 2~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 판결대로라면, 비공개 모임에서 토론했을 뿐인데 이것이 살인보다 중한 죄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회합 참석자들이 이 의원과 상명하복 관계에 있고 발언에 적극 호응한 점 등을 보면 참석자들이 가까운 장래에 내란 범죄를 결의·실행할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구체적 ‘행위’가 없어도 참석자의 ‘내심의 목적’을 추정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재판부는 이 재판이 개인의 정치 사상(내면의 양심)을 단죄하는 ‘사상 재판’이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선고 결과만 봐도, “RO”의 실체 여부는 진정한 쟁점이 아니었다.

박근혜와 이 나라 통치자들은 노동운동 일부의 친북사상을 마녀사냥하고 처벌함으로써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고조될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저항을 분열시키고 위축시키려 한 것이다.



8월 11일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판결에 울분을 토하는 가족과 지지자들.

우익의 압력에 순응한 사법부

내란 음모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다면서도, 굳이 형법상 내란 혐의에 유죄를 유지한 것은 재판부가 박근혜 정부와 우익의 압력을 판결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형법상 내란죄로 좌파를 단속하려는 행정부의 의도에 편입된 것은 사법부 역시 통치자들의 일원으로 체제를 수호하는 데서 한마음이라는 방증이다.

현재 한국의 우익과 지배자들은 세계 자본주의 위기에서 비롯한 경제와 안보 위기감 때문에 갈수록 신경질적이 되고 있다. 자본주의 계급지배 질서를 유지하려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외양

이 일부 훼손되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핵심 증거들을 기각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3권 분립을 내세운 통치기구의 일부로서 대중에게 존재(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RO”의 실체와 내란 음모 혐의는 검찰의 증거로는 도저히 입증됐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짜퉁 박정희” 정권의 유신 흥내는 ‘유신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유신 스타일’일 뿐이라는 것이 이번 판결에서도 드러난 것이다. 이것은 노동운동이 마녀사냥에 그다지 위축되지 않고 민영화와 고통전가에 맞서 곳곳에서

싸워 온 덕분이기도 하다.

결국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것을 드러냈다. “RO” 조직을 전제로 논리를 세운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청구도 정당성이 크게 훼손됐다. 이 판결대로라면, 정부는 순전히 진보당의 강령과 활동만을 놓고 위험 정당임을 증명해야 한다. 정치 사상 탄압이라는 본질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운동은 세월호 참사, 의료 민영화 등 각종 개악과 고통전가 공세에 맞서 파업과 거리 투쟁 등 더 투쟁적 저항을 해야 할 때다.

내란 선동죄는 ‘형법 안의 국가보안법’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대책위원회”는 최근 ‘5월 12일 강연 녹취록’을 새롭게 정리해 공개했다.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참석자들 사이에 모종의 연락망이 있다는 것과 이석기 의원과 참석자들의 (파장되고 잘못된) 정세 인식과 정치 노선뿐이다.

그러므로 이를 근거로 중형을 선고한 것은 이 재판이 전형적인 사상 탄압 재판이라는 뜻이다.

국가보안법은 머릿속 생각을 처벌하는 희대의 악법이다. 박근혜가 김정일을 만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이석기 의원이 북한 체제에 대해 우호적으로 ‘말’한 것은 죄가 된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행위자의 ‘내심’의 목적을 재판부가 자의로 재단해 처벌하기 때문이다. 행위를 처벌하는 부르주아사법 원리마저 부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형법(1953년)보다도 국가보안법(1948년)이 먼저 제정된 나라다. 냉전적 반공주의와 친서방 자본주의 확립을 목표로 미군정이 수립한 이 국가는 냉전 격화 속에서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제압하려고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다. 국가보안법은 처음부터 “내부의 적”에 맞선 한국 자본주의의 ‘체제 수호법’이었던 것이다.

형법 제90조 내란의 ‘예비·음모·선동·선전’의 죄 항목은 형법을 만들 때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대신 이 법의 기능을 형법으로 옮기려고 만든 ‘쌍둥이’ 조항이다. (거꾸로 말하면, 국가보안법이 우파의 말과 달리 ‘내부의

적’을 처벌하는 내란죄 처벌 법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이승만과 그 후배 독재자들은 두 법을 모두 유지하며 저항 단속의 무기로 애용했다.

결국 ‘증거는 없지만 내란을 목적으로 모인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유죄’라는 자의적 판결은, 형법 제90조 자체가 내면의 양심을 처벌하는 ‘형법 안의 국가보안법’ 조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법무장관 황교안은 지난해 국회에서 “내란 선동은 ... 내란에 대해 고무적 자극을 주는 일체의 언동”이라며, 행위로 옮겨지지 않은 말과 생각까지 처벌하는 조항임을 분명히 했다. 내란죄의 “국헌 문란” 개념은 국가보안법의 “국가 변란” 개념보다 더 폭넓게 저항적 사상을 처벌할 수 있다.

그래서 내란 선동죄의 성립 조건을 엄격히 적용하라는 진보당 변호인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한편, 국가보안법을 형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제안해 온 자유주의자들의 국가보안법 ‘개폐’론이 궤변적이고 위선적이라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국가보안법만 썼을 때는 얻지 못했거나 다른 이점도 있었다. 현존 국가체제 안에서 개혁을 추구하는 온건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내란 음모’ 혐의자들을 방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이미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던 온건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배신적 태도 때문에 노동운동은 진보당 방어 문제에서 분열했다.

김문성

사상 탄압은 노동계급 운동을 겨누고 있다

우익과 통치자들은 진보당 지도부 일부의 사상이 북한 체제에 우호적이라는 정치적 약점을 이용해 탄압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했다. 남북 통치자들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그런 정치가 눈엣가시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혀 혁명적이지 않은 진보당을 사상 탄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진보당이 노동계 진보 정당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노동운동이 급진적 정치사상과 만나 기존의 지배질서에 도전하는 방향으로 성장하지 않도록 내란 운운 호들갑을 떨며 본보기를 삼으려 한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보안법과 형법 제90조를 이용해 사상 탄압은 급진적 정치사상들을 노동운동 안에서 고립·격리하려는 박근혜와 우익·통치자들의 시도다. 특히, 궁극적으로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이 노동운동과 만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다.

그런 점에서 종북, 친북 같은 것은 사실은 빌미다. 이번에도 검찰과 재판부는 북한과 연계했다는 점은 정작 거의 다루지 않았다. 검찰은 1심 구형에서 “북의 지령이 없더라도 독자적 정세판단 후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했다. 실제로 북한과 관계가

없거나 북한 체제를 혁명적으로 비판해 온 사회주의자들도 이 법들의 처벌 대상이 돼 왔다.

이것은 저들이 처벌하고 욕되려는 것이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뜻이다. 사상과 표현, 결사의 자유는 자본주의의 오물에 맞서야 하는 노동계급에게는 필수적인 수단이다.

칼 마르크스의 말처럼 사상이 수백만 대중을 사로잡아 물질적 힘이 될 때, 진정으로 그 위력을 발휘한다. 노동운동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지배자들은 사상의 자유 자체를 가로막고 탄압하는 것이다.

윤 일병 사건

폭력적인 군대 기구가 낳은 충격적인 비극

육군 제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줬다. 윤 일병은 올해 3~4월 고문에 가까운 집단 폭행을 당하고 사망했다.

윤 일병 사건 한 달여 전인 6월 21일에는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에 시달리던 제22사단 임 병장이 총기를 난사해 부대원을 죽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들은 사회가 민주화됐으니 군대도 군사 독재 시절보다는 나아졌으리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 징병제 하에서, 또 부유층 병역 기피가 만연해 있던 터라 평범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과 분노를 느꼈다.

군대는 사회에서 가장 억압적인 조직이다. 계급 지배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군대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주로 노동계급 자녀들을 데려다가 다른 나라나 자국 노동계급에게 총부리를 겨누게 한다. 이런 본질 때문에 그 조직은 필연적으로 억압적이고 상명하복을 철저히 하게 따른다.

그러므로 엄격한 군기와 가혹 행위는 사실 군대의 본질에서 비롯한다. 국방부 발표를 봐도 군기사고 사망이 안전사고 사망의 갑절이다.

악랄한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한 가해 병사들은 소외 하에서 자존감이 낮은 나머지 고참 병사라는 사소한 우월적 지위에서 '희열'을 느끼는 부류였다.

전투형 부대

그럼에도 진정한 책임은 군대의 위계와 고위 지휘관들에게 있다. 상급 지휘관들은 군대의 상명하복 질서를 유지하려고 병사들 사이에 '고참—졸병'이라는 위계적 서열 관계를 부추기며



〈군 사망사고 현황〉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계	124	128	121	134	113	129	143	111	117
안전사고	50	50	39	58	32	46	42	38	37
군기사고	74	78	82	76	81	83	101	73	80
군기사고 중 자살	64	77	80	75	81	82	97	72	79

이용한다.

윤 일병 사고 후 전역자들이 언론과 인터뷰한 것을 봐도 장교 집단이 가혹 행위를 묵인하고 은폐한 장본인이라는 점이 명백하다.

“신고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포대장이 와서 ‘누군가 이 번호로 참모장에게 전화를 했다, 누군지 나와라’”, “자길 폭행했다고 소원수리 쓰잖아요. 그럼 중대에서는 바로 옆 소대로 보내 버리는 거예요. 비겁한 사람, 그런 취급 해 버리고.”

윤 일병에 대한 폭력에 부사관도 가담했는데, 부대 지휘관들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 지금 엽기적 가혹 행위 사

실들을 알아낸 군단 헌병대의 첫 수사 결과를 당시 국방장관이자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인 김관진이 보고받았나 아니냐 하는 진실 공방이 있다.

진상이 무엇이든 군대의 고급 지휘관들이 이 사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되도록 군대 밖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은폐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는 점만큼은 명백하다.

한편, 군기사고 증가는 동아시아 불안정과 남북 관계 악화와의 관계가 있다. 국방부의 “군 사망 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11년에 부대 내 자살 사건 수가 급격히 오른다. 이때는 2010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일어난 뒤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말 기존의 관리형 부대에서 실전적 전투형 부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연히 병사들의 군기를 다잡으려고 닦달했을 것이고, 그런 만큼 병사들 간 가혹 행위도 더 심해졌을 것이다. 윤 일병과 임 병장이 있던 28사단과 22사단이 모두 전방 부대라는 점도 이런 추정에 힘을 보탠다.

철저히 반민주적인 군대의 본질상 고위 지휘관들은 자신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사건은 감추려 한다. 군대는 억울하게 죽은 청춘들의 죽음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국가 안보’라는 명분으로 은폐가 정당화된다.

그래서 사인도 못 밝힌 군 의문사 사고가 많다. 8월 6일 ‘의무복무 중 사망 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전국유가족협의회’의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우리는 차라리 윤 일병이 부럽습니다. 최소한 부대에서 무슨 일을 겪었고 왜 죽게 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도 헌병대 의견서, 최초 사건 상황 보고, 사망자 발생 보고 및 시체 처리 지휘 요청서 등 총 9건의 수사 기록이 재판 증거에서 누락됐다.

군대 자체가 극도로 비민주적이므로 자체 정화로 사고를 줄이거나 예방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웬만한 조치로는 군대 내 인권 사고를 해결할 수 없다. 노동계급의 자녀들이 원치 않는 군대에 끌려가 끔찍한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강제 징집이 폐지돼야 한다.

물론 유가족들과 민간단체들이 군대 외부에서 군대 내 인권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징병제에 비해 모병제는 ‘차악’일 것이다. ‘강제’라는 요소가 없다는 점에서 ‘덜’ 나쁘다고 할 수는 있지만, 노동계급 청년의 더 가난한 부분이 국내외의 노동계급과 적대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 일쑤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나쁜 제도다.

노동자계급과 반자본주의 운동은 더 좋은 것을 바랄 자격이 있다. 그것은 사회의 근본적이고 철저한 변혁 과정 속에서 군대의 민주화를 바라는 것이다. 사병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고 언제나 소환할 수 있는 철저히 민주적인 군대 말이다.

물론 이 일을 위해서는 노동자 운동이 강화돼야 한다.

김문성

함준식 속초의료원 지부장 인터뷰

“최문순 강원도정은 공공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 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네 가지인데 첫째는 2011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이 나온 게 있어요. 그 조정안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속초의료원은 4년째 임금을 동결했어요. 최저임금법도 어기고 있죠. 조정안은 이를 시정하는 임금 인상안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 비정규직이 너무 많으니까 정규직 시켜 달라. 셋째, 박승우 병원장은 2012년 5월 1일 취임한 이후 승진·승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넷째, 근무조건을 좀 개선해 달라.

이 네 가지를 요구하며 지난해 10월부터 교섭을 12차까지 했지만, 병원 측은 일절 수용을 거부하고, 병원이 어렵다는 핑계로 동결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7월 22~30일에 1차 파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생각해 31일자로 복귀했는데도 병원장은 31병동, 71병동, 물리치료실에 직장폐쇄를 하는 만행을 저질렀죠.

우리는 직장폐쇄 중단을 요구하며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지역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어요. 병원장은 결국 8월 11일 직장폐쇄를 해제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병원장은 직장폐쇄를 해제하면서 노동강도가 높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에는 조합원만 6명을 투입하고, 기존 8명이 근무하던 51병동에는 비조합원 위주로 15명이나 배치했어요. 차별적인 근무 조처를 단행한 겁니다. 원장이 정말 자질이 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올해 강원도는 5개 지방의료원에 2월 25일자로 ‘경영혁신대책’을 뿌렸습니다. 경영혁신대책을 보면 원장의



속초의료원지부는 제대로 된 공공병원 서비스를 정취하려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

책임경영제,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고,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표를 만들게 됩니다. 지방의료원 원장들이 강원도 말을 안 들으면 옷을 벗기는 제도인 거죠.

그런데 성과급 지급률을 보면 공공적 업무를 맡으면 10점을 책정하고, 단체협약이나 제규정을 고치는 것은

30~40점을 배정하는 식으로 돼 있어요. 몰상식한 경영혁신인 거죠. 그러다 보니 원장들도 노조와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최문순 강원도정은 공공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최문순 지사에게 수익성 논리가 아니라 공공병원의 공공적 기능

을 강화하라고 주문하고 면담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강원도와 최문순 지사는 면담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영혁신대책을 폐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2차, 3차 파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터뷰·정리 최민혁



영리 병원, 메디텔, 대학병원 자회사 ...

전면적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박근혜

박근혜 정부는 8월 12일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이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의료 민영화를 더 폭넓고 더 강하게 추진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우선 ‘영리 자회사’ 설립을 위해 관련 규제들을 대폭 완화한다. 자회사 설립 허용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한 꼼수다.

모병원의 의료진이 자회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권유하거나, 심지어 강요해도 환자와 보호자는 이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

자회사가 병원 안에 자리 잡고 진료 시설의 일부인 듯이 눈속임할 수도 있다.

메디텔이 대표적이다.

장호중



박근혜는 의료 민영화를 강행하려 한다. 그러나 이에 맞선 저항도 확대되고 있다. 7월 22일 보건의료노조 2차 파업 집회.

메디텔(호텔형 병원) 전면 허용

입원실을 비싸게

메디텔은 의료관광객을 위한 호텔이다. 그런데 메디텔이 건물 일부를 의원에 임대할 수 있게 했다. 의원은 병상이 30개 미만인 의료기관이다.

그러면 메디텔의 객실은 입원실로 활용될 수 있다. 특별한 치료·안전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지만 더 비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입원비가 너무 비싸면 민간보험사들이 보험을 판매할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비싼 객실료와 보험료 둘 중 하나를 선택

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종합병원 안에 메디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대기’ 환자들이 머물러야 하는 비싼 병실이 될 수 있다. 지금도 병원들은 많은 사람들이 비싼 1인실에 입원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메디텔 설립 허가를 위한 환자 유치 실적도 모병원의 실적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메디텔이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일반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메디텔은 대기업들이 병원들을 체인 형태로 소유하는 고리 구실을 할 수도 있다.

임상실험 규제 완화, 의료정보 유출

안전성이 의심스러운
치료법도 마음대로 사용하기

정부는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와 실험에서도 안전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 한다. 예컨대 줄기세포 치료제는 아직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나마 자기 몸과 가까운 자가줄기세포에 대해서만 일부 임상실험을 면제해 줬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일부 임상실험 면제 대상을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의료기술의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고 “다른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만” 실험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없애려 한다.

이런 임상시험에 건강보험 재정까지 투입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을 영리 기업에 퍼 주는 파렴치한 짓이다.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국민건강 관련 통계를 연구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기업들에게 환자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구실이 될 수 있다.

대학병원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

무분별한 임상실험 증가

정부는 영리 자회사 설립이 ‘대학병원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이며 합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최근 서울대병원 등 ‘학교법인’이 세운 의료기관도 의료법을 따라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 발표됐다.

그러자 정부는 이번에 “산학협력법 유권해석을 통해” 대학병원도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대학병원들이 법을 어긴 것은 부정하면서도 이번에 대학병원의 자회사 설립을 전면 허용하려는 것이다.

대학병원이 기술지주회사(자회사)를 세우면 이 자회사가 대학병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임상실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연구 결과는 특허화해 대학병원의 자회사가 독점할 수 있다.

국제의료 특별법

의료 광고와 보험사의
내국인 환자 유치 허용으로

정부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 광고를 허용’하고,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를 허용’하려 한다.

이 조처는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 광고와 보험사의 내국인 환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보험사들과 국내 병원 사

이에 ‘직불계약을 활성화하는 조처도 포함됐다. 이는 보험사가 병원의 수익성 논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연결고리가 된다. 직불계약을 맺으려면 보험사가 자기 기준에 따라 치료 적절성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이 하는 일을 민간 보험사에 맡긴다는 얘기다.

보험사들은 필요한 치료는 줄이는 한편, 비싼 보험료를 위해 불필요한 치료를 남용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

영리병원 설립 강행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병원 설립도 추진한다. 이 병원은 영리병원이다.

‘외국인 진료’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내국인 진료도 가능하고 국내 자본 투자도 가능하다.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을 세우려다 최소한의 응급의료체계도 갖추지 않아 사실상 심사에서 탈락한 중국계 CSC의 사업 계획 승인도 별 근거 없이 다시 추진하려 한다.

건강기능식품 부대사업 허용

환자에게 강매하기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제출하며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부대사업 허용 범위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당시 의료민영화 반대 진영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정부는 다시 건강기능식품 음료 연구개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도 계속된다

박근혜 정부는 7·30 재보궐 선거 결과를 기회로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려 하는 듯하다.

그러나 의료 민영화 정책은 이미 지지 않은 저항에 직면해 있다. 8개월 만에 2백만 명이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병원 노동자들이 2차 파업에 나선 7월 22일에는 하루 만에 무

려 60만 명이 서명에 참가할 정도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본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고시를 저지하기 위해 8월 19일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지역대책위 대표자회의(가칭)’를 개최할 예정이다. 8월 20일~29일에 고시 저지를 위한 집중 행동을 벌일 것이다.

8월 말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이

다. 이는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징검다리 구실을 할 것이다. 3차까지 이어진 ‘생명’과 ‘안전’의 물결’도 계속될 것이다.

지역 대책위 건설을 확대하고 영리병원과 자회사 설립에 맞선 현장과 지역 투쟁도 강화할 것이다. 제주도와 수도권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고 서울대병원, 고려대의료원 등의 자회사 설립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도 계속될 것이다.

고무적이게도 보건의료노조와 서울대병원 노조는 8월 말 3차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뿐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가짜 ‘정상화’ 중단도 요구할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정상화’한다며 국립대병원과 특수 목적 공공병원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공격하려 한다. 더 적은 인력과 더 높은 노동강도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가짜 ‘정상화’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의 질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